



2009년 세계경제전망: 세계지역경제

세계지역연구센터

I. 선진경제권	II. 신흥시장국	III. 개도국경제권	
1. 미국	1. 중국	1. 동남아	가. 경제 동향
2. 일본	2. 인도	2. 중남미	나. 경제정책 현안 및 방향
3. EU	3. 러시아	3. 중동	다. 2009년 경제 전망
4. 대양주	4. 브라질	4. 아프리카	
	5. 멕시코	5. 중앙아시아	

주요내용

▶ 세계적인 금융불안정이 진정되지 않고 있는 한편, 금융위기에서 파급된 실물경기 침체현상이 전세계에 걸쳐 뚜렷해지고 있음.

- 국제금융위기가 초래한 전방위적인 유동성경색 현상은 달러와 엔화를 제외한 거의 모든 통화의 가치를 급격히 떨어뜨렸으며, 선진국과 개도국을 막론하고 기업활동을 악화시키고 있음.

- 미국, 일본, EU 등 선진경제권 국가들에서는 가계소비와 기업투자가 둔화되고 실업률이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유럽과 동남아의 수출국가들과 러시아, 중남미 등의 자원생산국들이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음.

- 금융산업과 국제교역관계의 발달이 미약한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의 일부 개도국들은 국제금융위기의 파장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으나, 이 국가들에서도 외국인투자자금에 대거 회수되는 등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 대부분 국가들에서 정부가 유동성 부족을 완화하고 경기침체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음.

- 세계적으로 경제정책의 중심이 금융안정화에서 재정정책 및 산업정책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적극적인 경기부양을 목표로 하는 정책패키지 프로그램을 입안하고 있음.

- 동남아와 같이 2008년 중에 매우 높은 물가상승을 경험했으며 상대적으로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을 덜 받은 지역의 국가들에서는 2009년에도 물가안정이 여전히 중요한 정책목표가 될 전망이다.

▶ 2008년 하반기부터 전세계적으로 뚜렷해진 경제성장률 저하 현상은 2009년에 접어들면 한층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됨.

- 대부분의 예측기관들은 2009년에 미국, 일본, EU 등 선진경제권 국

가들의 경제성장률이 0~1%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신흥시장국가 및 개도권 국가들은 2~3%의 성장률 하락을 겪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중국의 경우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토대로 2009년 8%대의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세계적인 경기침체하에서 해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고려할 때 이의 달성을 낙관할 수 없음.

- 인도, 베트남과 같이 경제개발 잠재력이 높은 신흥개도국들은 2009년에도 꾸준히 유입될 것으로 보이는 외국인직접투자(FDI)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제성장률 하락폭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

-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2008년 상반기에 경험한 것과 같은 물가상승 압박은 2009년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해소될 것으로 보임.

▶ 2009년 하반기에 세계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여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이를 확산하기에는 아직 이름.

- 2009년 중에 세계경제가 경기침체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을 비롯한 선진경제권 국가들에서 주택, 금융부문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많은 국가들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기부양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어야 할 것임.

▶ 세계적인 경기침체하에서 한국의 해외 수출과 투자진출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선진경제권 중에서는 엔고화의 일본에 대한 수출확대전락을 새로이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신흥시장국가 중에는 CEPA 체결로 수출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인도를 비롯하여 상대적으로 경기침체가 덜한 신흥시장 및 개도국들에 대한 수출확대와 투자진출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I. 선진경제권

1. 미국

가. 경제 동향

■ 실물경기 침체 본격화

- 2008년 3분기에 미국의 전기대비 실질 GDP 성장률은 -0.5%를 기록했으며, 동시에 소비, 투자가 감소하고 수출 증가세가 대폭 하락하는 등 실물경기가 본격적인 침체에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줌.

표 1. 실질GDP성장률

	2007	(단위: 전기대비연율, %)		
		1/4	2/4	3/4
GDP	2.0	0.9	2.8	-0.5
소비지출	2.8	0.9	1.2	-3.7
비거주투자	4.9	2.4	2.5	-1.5
거주투자	-17.9	-25.0	-13.3	-17.6
수출	8.4	5.1	12.3	3.4
수입	2.2	-0.8	-7.3	-3.2

자료: 미국 경제분석국(BEA)(2008. 11. 25).

- 2008년 들어 연속 10개월째 악화되고 있는 고용수준도 실물경기의 침체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바, 2008년 10월의 실업률은 1994년 3월 이후 최고수준인 6.5%까지 상승했음.

■ 개인소비지출 감소가 성장률 하락에 가장 큰 영향

- 장기간의 주택경기 침체와 고용시장의 악화로 위축되고 있는 개인소비지출은 2008년 3분기에 전기대비 -3.7%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17년만에 처음으로 분기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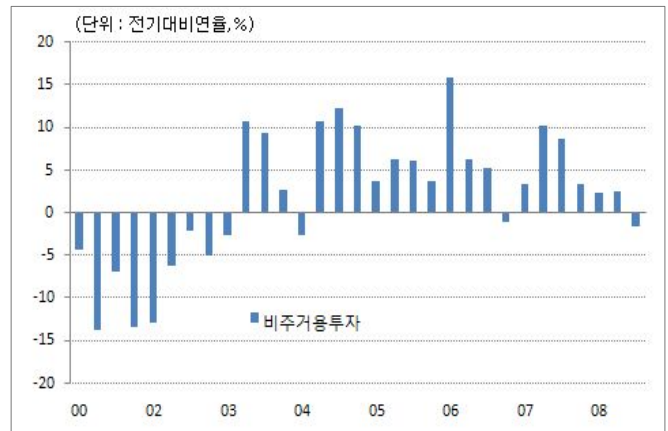
- 2008년 10월 소매판매액(Retail Sales)이 전월대비 -2.8% 감소하여 4분기 들어서도 개인소비지출의 하락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줌.

■ 금융위기 심화에 따른 기업투자 부진 지속

- 2007년 연간 4.9%에 그쳤던 비주거용투자 증가율은 2008년 들

어 금융기관들의 극심한 신용경색의 여파로 계속 위축되었으며, 3분기에는 전기대비 -1.5% 기록하여 하락세로 돌아섰음.

그림 1. 미국 '비주거용 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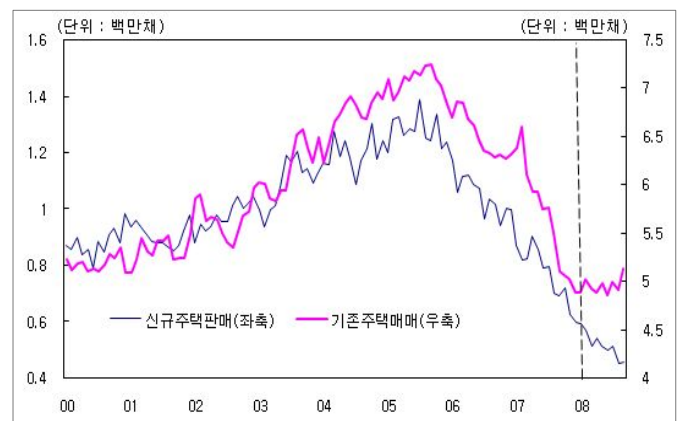


자료: 미국 상무부(2008. 11).

■ 주택시장 침체 지속

- 미국의 주택가격수준을 나타내는 케이스-실러(Case-Shiller) 주택가격지수는 2008년 8월에 전년동월대비 16.6% 하락하여 20개월 연속 하락을 이어감.
- 2008년 10월 현재 신규 및 기존주택 판매는 각각 연 43.3만 채(전년동월대비 40.1% 감소), 연 498만 채(전년동월대비 1.6% 감소)를 기록하고 있음.

그림 2. 신규주택 및 기존주택 판매 추이



자료: 전미부동산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2008.11).

- 압류된 담보주택들이 매물로 출회되면서 주택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매물압박이 주택가격을 하락시키고, 이것이 모기지 연체를 더욱 가중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 2008년 2사분기 현재 전체 담보주택의 압류(foreclosure) 비율은 2006년 말보다 약 2.5배 상승한 2.75%를 기록했으며, 특히 서브

프라임 담보주택의 압류 비율은 2006년 말 4.53%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8년 2사분기에는 11.81%를 기록했다.

표 2. 주택차압 비율 추이

(단위: %)

	2004	2005	2006	2007				2008	
				1/4	2/4	3/4	4/4	1/4	2/4
전체 주택	1.15	0.99	1.19	1.28	1.40	1.69	2.04	2.47	2.75
프라임	0.49	0.42	0.50	0.54	0.59	0.79	0.96	1.22	1.42
서브프라임	3.82	3.33	4.53	5.10	5.52	6.89	8.65	10.74	11.81

주: 각년도 기말 기준

자료: Bloomberg, Mortgage Bankers Association(2008.11).

나. 경제정책 현안 및 방향

■ 부시 행정부의 7,000억 달러 구제금융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

- 2008년 10월 초 의회를 통과한 7,000억 달러 규모의 긴급 구제금융 정책만으로는 실물경기의 악화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 일반적 평가임.

표 3. 미 재무부 7,000억 달러 구제안 주요 내용

일자	주요 정책 발표 내용
10월 4일	수정된 긴급경제안정화법안 미 하원 통과
10월 14일	재무부는 구제금융 7,000억 달러 중 2,500억 달러를 은행, 저축은행, 기타 예금금융기관 지분 매입에 사용할 것임을 발표
11월 13일	폴슨 재무장관은 7,000억 달러 부실자산매입프로그램(TARP)의 절반으로 자동차 대출,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 등 소비자 신용경색 완화를 위해 사용할 것임을 밝힘.

■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추가구제금융 방안은 보다 신속, 과감하고 직접적인 경제회생정책 시행을 예고

- FRB가 11월 24일 발표한 8,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구제금융 조치의 실행은 주택구입자의 비용을 감소시켜 주택시장 및 금융시장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나,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2분기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됨.

표 4. FRB의 8,000억 달러 추가구제금융안

규모	주요 내용
총 8,000억 달러	주택대출 활성화, 소비자 및 중소기업의 신용경색 완화 목적
- 6,000억 달러	- Fannie Mae, Freddie Mac, 연방주택대출은행(FHLM)이 발행한 모기지 채권 1,000억 달러를 FRB가 직접 매입 계획 - Fannie Mae, Freddie Mac, Ginnie Mae가 담보하는 모기지담보부 증권(MBS) 5,000억 달러 매입 예정
- 2,000억 달러	신규대출프로그램인 TALF(Term Asset-backed securities Loan Facility)를 통해 학자금 대출,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대출, 연방중소기업청이 보증한 대출 등을 담보로 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활성화하여 소비자 및 중소기업 금융에 기여

■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2009년 1월 20일)을 전후하여 보다 강력한 경제위기 대응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 대선공약 중 경기회생 관련 부분의 조속한 집행과 더불어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오바마는 대선공약 중에서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 대한 세금 혜택,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 녹색에너지산업 지원을 통한 고용창출 등의 경기진작책을 제시한 바 있음.

○ 또한 오바마 정권인수팀은 향후 2년간 5,000억 달러 이상의 연방정부 지출 및 감세를 통한 새로운 경기부양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음(11월 24일).

○ 오바마 신정부는 취임 즉시 2개년 경기부양책을 시행하여, 2년 내에 250만 명의 일자리 창출, 교량 및 도로 재건축, 학교시설 현대화, 대체에너지 연구 및 고효율 자동차 개발 등의 경기부양책을 통해 현 경제위기 조기 탈출을 추진할 예정임.

■ 미국 신정부가 강력한 보호무역정책으로 급속히 회귀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오바마 당선자가 대선과정에서부터 상대국들에 통상협정 이행의 강화를 주장해왔으나, 최근에 이매뉴얼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는 추가 경기부양책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신정부에 내정된 가이트너 재무장관, 서머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로머 경제자문회의 의장 등 경제팀 거의 전원이 자유무역주의자이며 실용적이고 탈이념적인 인사들로 내정된 점도 강력한 보호무역정책으로의 급선회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임.

표 5. 오바마의 대선 공약 경제회생정책

정책	주요 방안
경제회생방안 (경기해법 및 재정지출)	- 세금환급을 통한 경기부양 ○ 중산층과 근로자층에 세금환급을 통한 경기회복 방안 제시(1억 5,000만 근로자에게 일인당 500달러, 가구당 1,000달러 세금환급) - 가계 및 기업의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연금조기(59.5세 이하)인출에 대한 위약금 면제, 중소기업 대출 확대 등 600억 달러 규모의 대책을 제시 - 실업수당 수혜기간 연장 및 실업수당 과세 유예와 정규직 채용기업에 대해 1인당 3,000달러 세금공제 -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자금 규모 확대, 지방 및 주정부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조세정책	- 고소득 가정의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6개 소득등급 중 하위 4개 등급의 소득세율은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반면 상위 2개 등급의 소득세율은 인상) ○ 개인소득세 과거 최고세율 39.6%로 복귀 지지(현행 35%) ○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을 신설하고 연소득 5만 달러 이하 고령자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 - 상속세 2009년의 계획된 수준 유지(2001년 감세안에 따라 면제기준이 2008년 200만 달러→350만 달러로 확대, 최고세율 45%) - 자본이득세 및 배당세의 최고세율 인상(15%→20%)

자료: 오바마의 대선공약(Blueprint for Change: Obama and Biden's Plan for america)을 토대로 작성.

다. 2009년 경제 전망

■ 2009년에도 미국경제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

-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책과 FRB의 추가 구제금융 조치가 2009년 2분기부터 효과를 발휘하여 금융부문과 주택시장, 가계 및 기업 부문의 신용경색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나, 주택부문의 부실이 계속 심화되면서 신용경색과 경기침체가 더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서브프라임 부실의 정확한 규모가 아직도 드러나지 않고 있고, AIG 등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예상 밖의 지원액도 증가하고 있어, 주택부문과 금융부문의 불확실성이 제거될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어려움.
- 실행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직접 지원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경색의 후유증으로 모기지 대출이 축소되고 고용상황의 악화로 가계의 주택구입 여력이 감소하여 2009년 내에 주택시장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2009년 미국경제의 성장률은 -0.5 ~ -1.0%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

-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구제금융 정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2009년 하반기부터 미국경제는 침체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09년 전체로서는 마이너스 성장률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
-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역자산 효과와 고용상황의 악화로 인한 소득감소로 가계소비지출이 조속히 회복되기 어려우며, 기업투자 또한 경기침체 탈피가 가시화된 이후에나 회복될 것으로 보임.
- 주식시장의 침체와 변동성 증대, 고용시장 악화 및 주택시장 부실로 인해 특히 2008년 4분기와 2009년 1분기의 성장률 하락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
- 2009년 미국 고용시장은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의 구조조정 여파 등으로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실업률이 8%대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표 6.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2007	2008	2009
모건스탠리	2.0	1.3	-1.3
골드만삭스		1.3	-0.8
UBS		1.3	-0.6
IMF		1.4	-0.7
OECD		1.4	-0.9

주: 모건스탠리 2008년 11월 1일, 골드만삭스와 UBS는 2008년 11월 7일, IMF는 11월 6일, OECD는 11월 11일 전망치임.

■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감소할 전망

- 2008년에 비해 2009년 미국의 수출은 위축될 것이나 유가 및 원자재가격 하락에 힘입어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적자폭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예상됨.

표 7. 미국 2009년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전망

(단위: 억 달러)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상품 수출	8,946	10,231	11,485	13,422	12,959
상품 수입	16,818	18,614	19,679	21,400	17,258
무역 수지	-7,871	-8,383	-8,194	-7,977	-4,299
경상 수지	-7,290	-7,881	-7,312	-6,797	-3,420

자료: Global Insight(2008.11.25)

■ 2009년 초까지 대미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대미 무역수지 흑자 폭도 줄어들 전망

- 2008년 들어 한국의 대미수출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는데, 11월에는 전년동월대비 -6.2%로 급감한 21.4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대미수입은 -29.3%나 감소한 16.6억 달러를 기록했음.

- 2009년 미국의 경기침체로 개인소비자출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미수출 주요품목인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자동차부품, 반도체 등이 모두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임.

■ 2009년까지 미국의 대한국 투자 둔화세도 지속 전망

- 미국의 대한국 투자는 2004년 이후 금액과 비중 모두 감소되는 추세를 보여왔는데, 특히 2008년 3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56.9% 감소한 2억 5,3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투자비중도 8.8%로 크게 낮아졌음.
- 2009년에 미국의 경제상황이 회복될 가능성이 낮아 대한국 투자의 둔화 추세는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연구진 (미주팀):

* 국번: (02) 3460

이준규 팀장 (junkyul@kiep.go.kr, Tel: 1128)

김종혁 전문연구원 (jhkim@kiep.go.kr, Tel: 1193)

고희채 연구원 (hcko@kiep.go.kr, Tel: 1086)

2. 일본

가. 경제 동향

■ 2008년 들어 일본의 경기는 하강국면 진입

- 일본경제는 2007년 10~12월기를 정점으로 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내각부의 「월례경제보고」에 의하면 2008년 2월까지 「완전히 회복」, 3~5월까지 「정체상태」, 6~7월까지 「정체상태, 일부 악화」, 8~10월까지 「악화」, 그리고 11월에는 「악화, 세계경제 감속으로 하방압력이 급고조」 등으로, 일본정부의 경기판단이 2008년 초반부터 급속히 부정적으로 변화해 왔음.

■ 2008년 분기별 경제성장률 마이너스로 전환

- 2008년 1~3월기 실질 GDP 성장률은 0.6%(전기대비)였으나 4~6월기 -0.9%, 7~9월기 -0.1%로 마이너스 성장세로 전환
- 민간설비투자는 이미 2008년 1~3월기 -0.3%(전기대비)로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4~6월기부터는 민간소비, 수출 등 모든 수요항목이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성장률이 크게 떨어졌음.
- 7~9월기에는 소비, 수출 등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증가세가 매우 약한 반면, 설비투자의 감소세가 더욱 강화되고 있어 경기악화의 주된 요인이 설비투자의 감소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1. 일본경제의 최근 동향

	2006	2007	2007		2008		
			7~9월	10~12월	1~3월	4~6월	7~9월
실질GDP	2.5	1.7	0.6	0.4	0.6	-0.9	-0.1
민간소비	1.8	1.7	0.2	0.2	0.6	-0.6	0.3
민간주택	0.2	-13.3	-8.4	-9.8	5.1	-3.1	4.0
기업설비	5.6	-0.1	1.8	0.5	-0.3	-1.4	-1.7
공적고정자본	-9.1	-1.8	-1.9	0.2	1.0	-5.5	0.4
수출	8.4	9.5	2.6	2.6	3.4	-2.6	0.7

자료: 내각부.

■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 하반기 경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

-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2008년 10월의 주가는 1년 전에 비해 무려 50% 이상 하락하였고, 현재까지도 주식시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음.
- 세계금융위기 직전인 8월에 달러당 100엔 후반대이던 환율은 10월 이후에는 90엔대로 떨어져 엔화 강세가 급격히 진행되었음.
- 주가하락과 엔고로 인해 기업들의 수익이 악화되고 있고, 그 결과 설비투자 감소가 지속되어 향후 일본경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나. 정책 현안 및 방향

■ 후쿠다 전 총리의 종합경제대책(8.29)은 당시의 고유가, 원자재가 격상 등에 대응하는 긴급대책의 성격이 강했음.

- 총 11.7조 엔 규모의 경제대책 중 약 2조 엔이 직접적인 재정지출을 동반하는 대책이었음.
- 후쿠다 총리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정말 필요한 대책에만 재원을 집중하고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는 등 재정건전화 노선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음.
- 종합경제대책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은 중소기업금융공고의 신용보증제도 확충사업으로, 약 9조 엔의 규모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것임.
- 정액감세는 보정예산에 들어가지 않았으나 금년 내 실시할 것을 명기하였고, 감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임시복지특별급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음.

표 2. 「안심실현을 위한 긴급 종합대책」(8.29)의 주요 내용

분야	주요내용	재정지출(조 엔)	사업규모(조 엔)
국민생활 불안해소	수입곡물의 정부판매가격 상승폭 억제	0.4	0.4
	고속도로요금 인하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에서의 저소득자의 보험료 경감		
지속가능사회로의 변혁 가속	태양광 발전설비 도입 지원	0.9	1.9
	공립학교의 시설 약 1만 동을 내진화		
	에너지 절약 투자촉진을 위해 세금 경감		
신가격체제로의 이행과 성장력 강화	원재료 가격상승에 대응한 중소기업 보증제도 창설	0.4	9.1
	에너지 절약형 선박, 차량도입 촉진		
합계(지방 0.1조엔 포함)		1.8	11.5
(재정투융자 추가분 포함)		2.0	11.7
정책감세	08년도 내에 소득세 및 개인주민세의 정액 감세를 실시. 동시에 노령복지연금의 수급자에게 급부금의 지급을 검토.		

자료: 『일본경제신문』(2008.8.30).

■ 신임 아소 총리는 재정건전화, 구조개혁보다는 경기대책을 더 강조한 추가경제대책 발표(10.30)

- 추가경제대책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경기자극책으로서의 성격이 강함.

표 3. 추가경제대책의 주요 내용

경기대책	시장대책	금융정책
○ 2조 엔 보조금 지급 ○ 주택론 세액공제 인상 ○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충 ○ 고용보험료를 인하 ○ 고속도로요금 인하	○ 증권우대세제 연장·확충 ○ 금융기관에의 자본주입한도 확대 ○ 금융기관보유주식의 매입 재개	○ 정책금리 인하 (0.5% → 0.3%) ○ 단기시장에 대량 자금공급 ○ 금융기관보유주식의 매입 재개

자료: 『일본경제신문』.

- 추가경제대책의 핵심은 2조 엔 규모의 보조금(給付金) 지급을 통한 소비진작 정책으로서, 당초 모든 세대에 지급할 방침이었으나 고소득자는 제외하기로 함.
- 추가경제대책에는 감세를 통한 내수진작 정책도 포함
 - 주택론에 대한 세액공제 상한을 지금까지 최고인 600만 엔으로 인상하였고, 증권우대세제에서는 상장주식의 양도세율 및 배당세율을 20%에서 10%로 인하하였음.
- 추가경제대책의 발표 이후 일본 내에서는 이 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보정예산(추가경정예산)의 수립을 둘러싸고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임.

■ 재정규율 약화에 대한 비판을 견제하기 위해 「중기 프로그램 기본방침」도 동시에 발표하였음.

- 향후 3년간을 일본경제 회복의 중점기간으로 하고, 이 기간 동안 감세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지만 경기회복 이후에는 소비세를 인상 등 종합적인 세제개편을 추진하여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방지한다는 내용임.

- 일부에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경기대책(예: 보조금 2조 엔)보다는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중장기적인 대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비판도 있음.

다. 2009년 경제 전망

■ 국제기관 전망

- IMF 등은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일본경제가 2009년(1~12월)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표 4. 국제기관의 일본경제 전망

	IMF	EIU
2008	0.5%	0.3%
2009	-0.2%	-0.1%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2008.11.6); EIU, Japan: 5-year forecast table(2008.10.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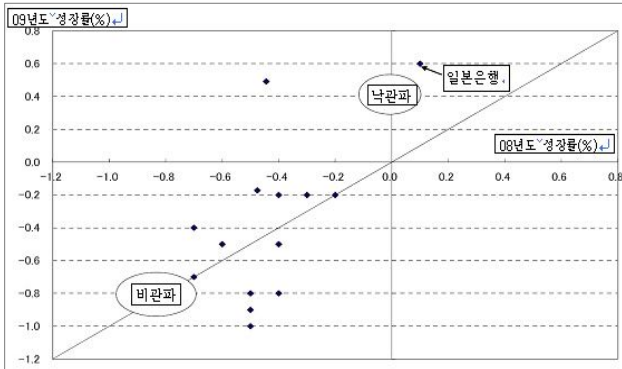
■ 일본 국내기관 전망

- 11월 말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모든 민간경제연구소들은 2008

년도 및 2009년도에 일본경제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2008년도 경제성장률에 대해서 조사기관들은 -0.5% 내외로 전망했으며, 2009년에 대한 전망치는 -0.5%에서 -1.0% 사이로 좀더 낮아졌음.

그림 1. 일본 민간경제연구소의 성장률 예측분포



자료: 일본경제연구센터, 「민간조사기관 경제예측」(2008년 11월 집계)

- 민간경제연구소와는 달리 일본은행은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음. 일본은행에 의하면 2008년도에는 0.1%, 2009년도에는 0.6%의 플러스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그러나 일본은행의 전망치는 2008년 10월의 「경제·물가정세 전망」에 발표된 것으로 최근의 급변하는 세계경제의 정세를 반영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함.

■ 2009년에는 수출과 설비투자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민간소비는 약한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수출은 2008년도에는 플러스 수준을 유지하나 2009년도에는 3.2%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수출 감소는 생산정체를 유발하고 설비투자를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됨. 실제로 2009년도 설비투자는 4.0%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민간소비는 2조 엔의 정액 보조금 지급, 유가 및 원자재가격 하락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고용불안 등 소비억제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여 0.5%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경기침체에 따라 2008년 7~9월기에 4.1%를 기록했던 실업률은 2009년에는 4.7%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미 비정규고용을 중심으로 고용조정이 시작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일본의 경기하락에도 불구하고 엔고의 지속으로 한국의 대일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아짐

- 일본기업들 사이에 엔고를 이용하여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증가시키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바, 2008년 10월에는 대일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4.6% 증가한 반면 대일수입은 1.2% 감소세로 전환했음.

■ 대일수입은 엔고 및 세계경기 침체로 인해 향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대일수입은 한국의 총수출 증가와 더불어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경기침체로 한국의 수출이 감소할 경우 대일수입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다만 엔고가 수입단가를 상승시켜 대일수입 금액이 증가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임.

연구진:

정성춘 일본팀 팀장

(jung@kiep.go.kr, Tel: 3460-1202)

3. EU

가. 경제 동향

■ 경기둔화에서 경기침체로 전환

- 2007년 하반기부터 완만한 경기둔화세를 보여왔던 EU경제가 2008년 2분기부터는 뚜렷하게 성장률 하락을 나타내고 있음.
- 특히 유로지역¹⁾의 경우 1999년 1월 유로화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기대비 분기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

표 1. EU 및 주요회원국의 실질 GDP 증가율 추이

	2007			2008		
	3/4	4/4	연간	1/4	2/4	3/4
EU27	0.7 (2.9)	0.4 (2.5)	2.9	0.6 (2.3)	0.0 (1.7)	-0.2 (0.8)
유로지역	0.6 (2.6)	0.4 (2.1)	2.6	0.7 (2.1)	-0.2 (1.4)	-0.2 (0.7)
독일	0.6 (2.4)	0.3 (1.7)	2.5	1.4 (2.7)	-0.4 (1.9)	-0.5 (0.8)
프랑스	0.7 (2.4)	0.3 (2.2)	1.9	0.4 (2.0)	-0.3 (1.2)	0.1 (0.6)
스페인	0.6 (3.6)	0.6 (3.3)	3.8	0.3 (2.6)	0.1 (1.8)	-0.2 (0.9)
영국	0.8 (3.3)	0.5 (2.9)	3.0	0.3 (2.3)	0.0 (1.5)	-0.5 (0.3)

주: 분기별 증가율은 전기대비 기준이며, ()는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자료: EU 통계청(Eurostat).

■ 민간소비, 기업투자, 수출의 동반 위축

- EU GDP의 50% 이상(2007년 57.3%)을 차지하는 민간소비가 2008년 상반기 이후에 나타난 주택가격 하락과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유럽 주식시장 침체 및 대출금리 인상으로 빠르게 위축되고 있음.
- 2008년 1분기에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투자 역시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감소와 금융위기로 인한 신용경색 등으로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으며, 수출증가율도 전세계적인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크게 낮아지고 있음.

1) 2008년 기준 유로화에 가입한 국가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핀란드, 그리스, 슬로베니아, 몰타, 키프로스 등 총 15개국임. 2009년 1월 1일부터 슬로바키아가 새로 유로화를 도입함.

표 2. 부문별 성장률

	전기대비				전년동기대비			
	2007 4/4	2008 1/4	2008 2/4	2008 3/4	2007 4/4	2008 1/4	2008 2/4	2008 3/4
민간소비	0.3	0.2	-0.1	0.1	2.0	1.8	1.0	0.4
정부소비	0.4	0.3	0.7	0.9	1.9	1.4	1.9	2.3
총 투자	1.2	0.7	-1.0	-0.8	4.0	3.3	2.1	0.1
수출	0.6	1.8	-0.1	0.3	4.3	5.4	4.3	2.6
수입	-0.1	1.4	-0.4	1.3	4.6	4.8	3.7	2.2
GDP	0.4	0.6	0.0	-0.2	2.5	2.3	1.7	0.8

자료: EU 통계청(Eurostat).

■ 물가상승압력 완화 및 실업률 증가

- 2008년 하반기 들어 국제 원자재가격의 급락 및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물가상승 압력이 빠르게 완화되고 있음.
- 2007년에 이어 2008년 1분기까지 비교적 안정적이던 실업률이 2008년 2분기 이후 기업투자가 위축되면서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 EU 평균 7%대를 넘어서고 있음.

■ 경기체감지수 급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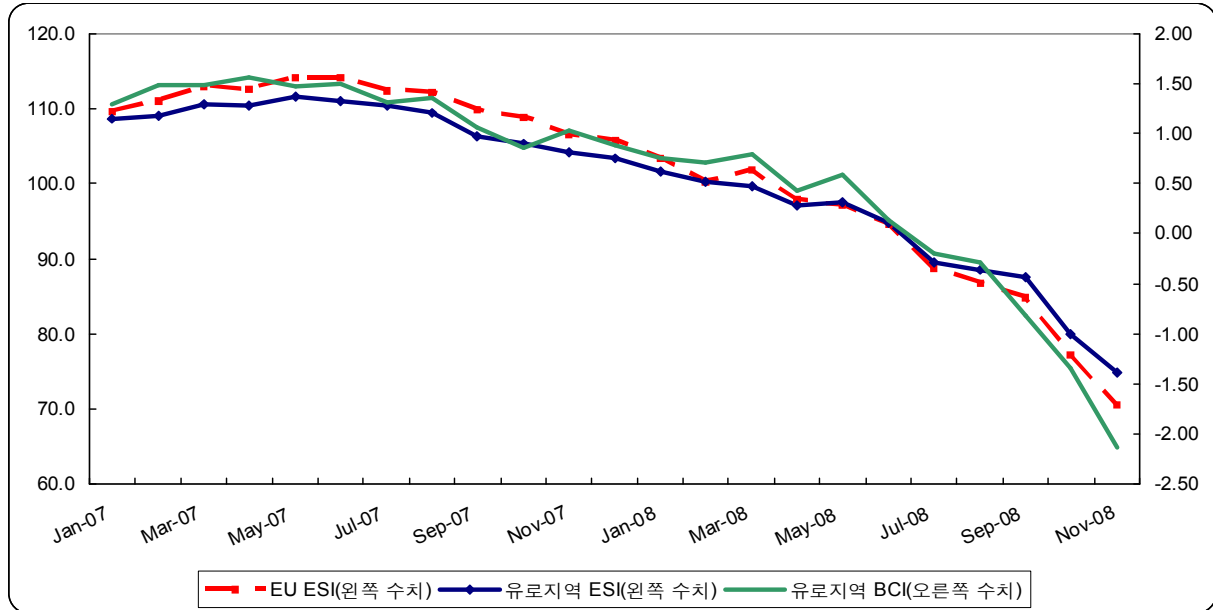
- EU 집행위가 발표한 11월의 EU 및 유로지역의 경기체감지수는 각각 70.5와 74.9로서 각각 1985년 1월 이후와 1993년 8월 이후로 최저수준을 보임(p. 10, 그림 1 참조).

나. 정책 현안 및 방향

■ EU 집행위원회 경기부양책 발표

- 11월 26일 EU 집행위원회는 2년간 2,000억 유로 규모(EU GDP의 1.5%)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함.
 - 경기부양책은 각 회원국이 GDP의 1.2%(총 1,700억 유로)에 해당하는 재정지출 및 감세정책을 시행하고, 나머지 300억 유로는 EU기금 및 유럽투자은행(EIB) 예산에서 충당하여 시행하기로 함.
 -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 고용촉진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인프라투자 확대 등이 경기부양책의 주요 내용임.

그림 1. EU의 경기체감지수(ESI) 및 사업환경지수(BCI)



주: 경기체감지수(ESI)와 사업환경지수(BCI)는 EU경제금융총국(Directorate-General for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이 기업체, 소비자,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현재 및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각각 100과 0을 기준으로 이보다 클 경우 경기상승을 의미함.

자료: European Commission,

○ 경기부양책 시행기간 동안에는 회원국들이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억제해야 한다는 EU의 재정건전성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음.

○ 경기부양책의 시행과 함께 각 회원국들은 기업에 대한 규제 및 행정부담 완화, 경기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근로시간 운영 및 고용서비스의 확대 등 구조개혁정책을 추진함.

– 그러나 부가가치세 인하방안에 대해서 독일과 프랑스가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등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경기부양책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음.

■ 중앙은행들의 대폭적인 금리인하

–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줄어들고 있어 유럽의 중앙은행들은 지속적으로 기준금리인하를 단행하고 있음.

○ 유럽중앙은행(ECB)은 10월과 11월에 기준금리를 각각 50bp씩 인하한 이후, 12월 4일에 다시 75bp(3.25% → 2.50%)를 인하

○ 11월에 기준금리를 150bp 인하했던 영란은행(BoE)도 12월에 다시 100bp를 인하하여 영국의 기준금리는 2.00%로 57년래 최저 수준

다. 2009년 경제 전망

■ 마이너스 경제성장률 전망

– 주요 경제예측기관들은 2009년 EU의 경제성장률이 0.0 ~ -0.4%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유로지역(15개 국가)은 EU 전체보다 성장률 전망이 더 낮게 나오고 있음.

○ 또한 EU 경제를 이끌고 있는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 주요 회원국의 경제성장률은 대부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표 4. 주요기관의 2009년 EU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EU 집행위	OECD	IMF	Global Insight
EU27	0.2	-	-0.2	-0.4
유로지역	0.1	-0.6	-0.5	-0.5
독일	0.0	-0.8	-0.8	-0.7
프랑스	0.0	-0.4	-0.5	-0.3
스페인	-0.2	-0.9	-0.7	-1.0
영국	-1.0	-1.1	-1.3	-1.5

자료: European Commission, Economic Forecasts(November 2008); OECD, Economic Outlook: Preliminary Edition(November 2008);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November 2008); Global Insight(November 2008).

■ 2009년 EU지역에서는 경기침체와 신용경색의 영향으로 무엇보다도 기업들의 설비투자과 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

- 주택 및 주식시장 위축으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과 고용악화로 민간소비 역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임.
-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09년 EU의 수출증가율은 2008년에 비해 대폭 감소한 1% 정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o 유로화 환율은 2009년에 평균 1.2달러 내외로 전망되는데, 이는 2008년 중반의 고점(1.6달러/유로)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나 EU의 수출증대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표 3. EU 및 유로지역의 2009년 GDP 항목별 증감을 예측치

(단위: 전년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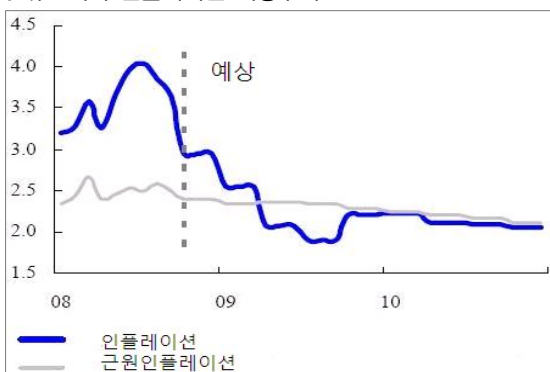
	EU			유로지역		
	2007	2008	2009	2007	2008	2009
민간소비	2.2	1.1	0.2	1.6	0.5	0.4
정부소비	2.1	1.8	1.3	2.3	1.8	1.2
총 투자	5.4	1.2	-1.9	4.3	1.2	-2.6
수출	5.0	3.4	1.4	6.0	3.2	1.1
수입	5.2	3.0	0.9	5.4	2.6	0.6

자료: European Commission, Economic Forecasts(November 2008).

■ 인플레이션 해소 및 실업률 상승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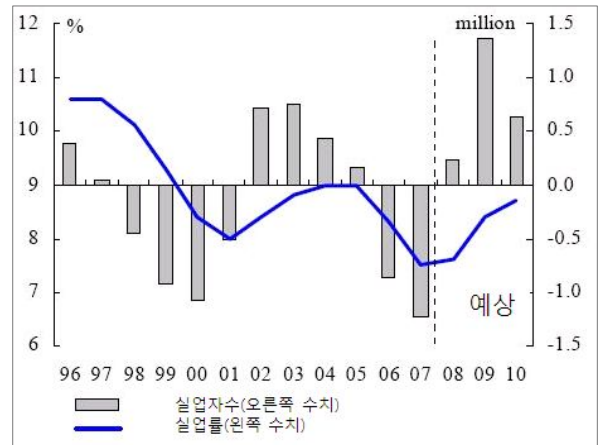
- 2008년 상반기 중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물가상승 압박은 하반기부터 유가 및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대폭 완화되었음.
- 2009년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감소로 EU 지역의 연간 물가상승률이 2.4%, 유로지역은 2.2%까지 낮아질 전망
- 금융업·건설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2009년 EU 국가들의 실업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유로지역의 실업률이 8% 중반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됨.

그림 6. 유로지역 인플레이션 예상추이



자료: European Commission.

그림 7. 유로지역 실업률 예상



자료: European Commission.

■ 한국의 대EU 수출증가율 둔화 예상

- 2009년에 예상되는 EU의 경기침체로 한국의 대EU 수출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됨.
- 특히 EU의 내수경기 위축은 한국의 대EU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됨.
- o 이미 2008년 유럽 내 자동차의 월간 판매량은 10월까지 6개월 연속 하락하여 1~10월 누적판매량이 전년 대비 5.4% 감소하였으며, 한국의 대EU 자동차수출도 10월까지 전년 대비 35.7% 감소하고 있음.

연구진(유럽팀):

* 국번: (02) 3460

김균태 전문연구원 (ktkim@kiep.go.kr, Tel: 1064)

오태현 연구원 (asroc101@kiep.go.kr, Tel: 1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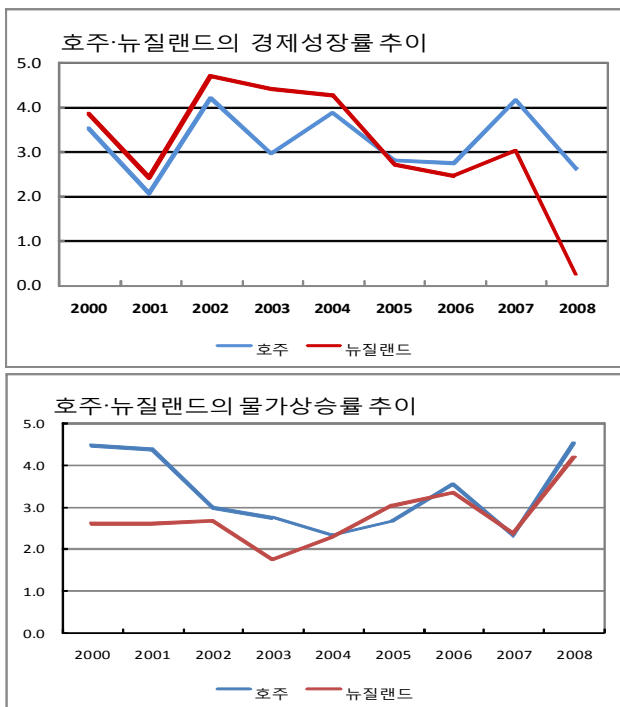
4. 대양주

가. 경제 동향

■ 경제성장률 저하

- 2008년 2분기부터 호주의 경제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뉴질랜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 뉴질랜드의 경우 가뭄으로 인한 유제품 및 농산물 생산 감소,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부동산 가치 하락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더해지면서 실물경기 침체가 더 심화됨.
- Global Insight는 2008년도 호주 경제성장률을 2007년 4.2%에서 1.6% 하락한 2.6%로, 뉴질랜드 경제성장률은 2007년도 3.0%에서 무려 2.7%가 하락한 0.3%로 예상함.

그림 1. 호주·뉴질랜드 경제성장률 및 물가동향 추이



주: 2008년도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은 Global Insight 추정치임
자료: Global Insight.

■ 물가상승세 둔화

- 2008년 3분기에 5.0%를 기록한 호주의 물가상승률은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전반적인 수요 감소와 국제 상품가격 하락으로 4분기에는 약 4.3%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뉴질랜드의 경우 2008년 3분기 물가상승률이 18년 만에 최고치

인 5.1%를 기록했으나 4분기 물가상승률은 3분기에 비해 0.5% 이상 감소할 전망

■ 통화가치 하락

- 미국발 경제위기의 여파로 호주와 뉴질랜드로 유입된 일본 및 유럽의 자금이 빠르게 회수되면서 두 나라 모두 급속한 통화가치 하락 현상이 발생함.
- 호주달러가치는 2008년 7월 15일 0.9786 US\$/AU\$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11월 27일까지 33.5% 하락하였으며, 뉴질랜드 달러도 2008년 3월 13일에 0.8176 US\$/NZ\$를 기록한 후 11월 27일까지 32.5% 하락하였으며, 특히 10월 1일~11월 27일 기간 동안에만 18% 절하되었음.

나. 정책 현안 및 방향

■ 호주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 호주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AU\$ 40억 규모의 주택 부동산 연계채권(Residential Mortgage Back Security)을 구입함(9월26일),
- 국내 모든 은행에 대하여 정부가 3년간 예금을 보증하고, 은행 해외 신용보증 및 해외진출 호주 은행의 자본 확충을 보증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동요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10월 12일).
- 또한 총 AU\$ 104억 규모(미화 약 73억 달러)의 경기부양책 패키지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호주 GDP를 약 1% 증대시킬 수 있는 규모로 평가됨(10월 14일).
- 경기부양책은 2009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며, 중저소득층 가계 소비와 거주부문 투자 증대를 목표로 하여 연금 확대, 가계 및 주택구입자들에 대한 지원, 인프라 건설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음.

- 호주 정부는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실물경제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9월부터 최근까지 세 차례에 걸친 금리인하를 단행하여 7.25%이던 기준금리를 5.25%까지 낮추었음.

■ 뉴질랜드 정부의 정책 방향

- 국내경기 부양을 위한 소득세율 인하조치가 10월 1일부터 발효된

가운데, 11월 총선에서 선출된 존 키(John Key) 수상은 2009년부터 추가적으로 소득세율 인하정책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함.

- 2008년 하반기에 두 번에 걸친 금리인하를 실시하여 8%이던 기준금리를 6.5%까지 끌어내렸으며, 모든 시중 금융기관에 대하여 정부가 2년간 예금을 보장하기로 함(Retail Deposit Guarantee Scheme, 10월 12일).
- 또한 미국과 15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프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자국통화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높임(10월 29일).

다. 2009년 경제 전망

■ 1% 초반대 경제성장률 전망

- 경제예측기관들은 최근까지 호주의 2009년 경제성장률을 1.5~2.0%로, 뉴질랜드의 경우는 -0.3~1.8%로 전망했음(표 1 참조).
- 2008년 하반기 들어 경제성장률 전망수치가 계속 낮아지는 추세이며, 예상되는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고려할 때 2009년도 호주와 뉴질랜드는 모두 1% 초반대의 경제성장률 기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표 1. 호주·뉴질랜드 2009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기관	호주	뉴질랜드
OECD	1.75%	-0.3%
해당국 재무부*	2.0%	1.8%
IMF	1.8%	1.5%
EIU	1.6%	1.5%
Global Insight	1.5%	1.7%
WESTPAC	2.0%	0.9%

주: 전 기관의 전망치는 2008년 11월 중에 발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

*호주 재무부 발표 전망치는 2009/10 회계연도 전망치임.

자료: 각 기관 발표자료 및 웹사이트에서 취합·정리.

■ 국내소비 진작 및 환율 방어가 경제위기 극복에 중요한 변수

- 2000년 이후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제성장은 낮은 실업률과 실질 임금 상승이 주택경기를 포함한 국내소비를 활성화시킨 데 기인하는 바가 큰바, 현재 양국 정부가 추진 중인 경기부양책이 고용상황의 유지와 국내소비 진작에 얼마나 기여할지가 경제위기 극복에 관건이 될 전망이다.
- 또한 통화가치의 급격한 하락은 소비자물가 상승과 더불어 외국

자본의 이탈현상을 야기하여 또다시 통화가치를 절하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바, 양국 정부의 통화가치 방어 정책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임.

■ 뉴질랜드의 경우 중국과의 FTA 발효가 경기회복에 호재가 될 수 있음.

- 2009년에 뉴질랜드와 중국 간 FTA의 본격적인 발효로 인해 자국 상품의 대중국 수출증가가 실현된다면, 이는 실물경제 침체를 극복하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2009년 한국의 대호주 및 대뉴질랜드 양자관계와 관련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FTA 협상 추진 여부임.

- 한국은 2007년에 호주·뉴질랜드와 각각 양자간 FTA 민간공동연구를 마쳤으며 2008년에 FTA 협상을 대비한 준비회의를 가짐.
-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FTA 협상이 개시되지는 않았지만, 양국과의 FTA 협상 개시 여부와 이에 따른 협상 진행은 2009년 양자관계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 2007년도 호주와 뉴질랜드는 각각 한국의 제9위, 제42위 교역상대국으로, 총 교역규모는 대호주 약 179억 달러, 대뉴질랜드 18억 달러에 이룸.
- 반면에 한국은 호주의 제4위 교역상대국이며, 뉴질랜드의 제6위 교역상대국임.

연구진(동서남아팀):

* 국번: (02) 3460

김한성 부연구위원 (hskim@kiep.go.kr, Tel: 1087)

백유진 연구원 (yjbaek@kiep.go.kr, Tel: 1154)

II. 신흥시장국

1. 중국

가. 경제 동향

■ 6분기 연속 성장률 둔화

-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분기 성장률이 9%로 낮아진 데 이어, 4분기에는 8%의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음.
- 2007년 2분기 이후 6분기 연속 성장률 하락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1997년 3분기부터 5분기 연속 성장률 둔화를 기록한²⁾ 이후 최장 기간임.
- 2008년 중국은 GDP성장률 9.6%, 소비자물가상승률 3.6%, 수출 증가율 20%, 무역수지 흑자 2,700억 달러 등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FDI 유치는 3분기까지 급증 추세가 이어져 744억 달러를 기록하여 2007년 총액(747.7억 달러)에 육박하였으나, 금융위기 효과가 가시화된 10월 이후 급격히 둔화되어 10월에는 전년동기대비 -0.9%를 기록

■ 산업생산 뚜렷하게 감소

- 10월까지 소매판매(22%), 고정자산투자(27.2%), 수출(19.2%) 등 수요지표들은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산업생산 증가율은 (6월) 16.0% → (7월) 14.7% → (8월) 12.8% → (9월) 11.4% → (10월) 8.2%로 급격히 둔화 중
- 그 밖에 소비자와 기업의 경기에 대한 각종 기대지수가 빠르게 하락하여, 10월 중국의 경기선행지수는 94.7로(전월대비 10.6↓) 크게 하락해 2002년 10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소비자신뢰지수도 7월(96.9) 이후 매월 하락하여 92.4를 기록

■ 인플레이션 우려는 해소

- 연초 8%대를 기록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월에는 4.0%까지 떨어졌고, 8월까지도 10.1%를 기록했던 생산자물가 상승률도 9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서 10월 6.6%를 기록함으로써 인플레이션 우려는 일단 진정

나. 정책 현안 및 방향

■ 공격적인 금리인하

- 중국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9월 15일 이후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으로 전환하여, 6년간의 이자율 인상 기조에 종지부를 찍고 11월 26일까지 총 4차례의 이자율 인하를 단행, 일년

그림 1. 중국의 분기별 성장률



자료: CEIC, SIC

2) 이번은 전년동기대비, 1997년은 분기별 연간 누적치 기준, CEIC.

만기 대출이자율을 7.47%에서 5.58%로, 예금이자율은 4.14%에서 2.52%로 인하했음.

- 특히 11월 26일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를 각각 1.08%p 인하한 조치는 1997년 10월 1.80%p 인하 조치 이후 11년 만에 최대 폭임.
- 2003년 이래 총 11.5%p 인상되었던 은행의 지급준비율도 9월, 10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총 2.5%p 인하
- 동시에 2008년 10월 9일 이후 발생하는 저축예금 이자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잠정 면제하는 조치도 시행

■ 4조 위안 규모의 대규모 재정지출 계획 발표

- 중국은 11월 5일 2010년까지 4조 위안(약 6,0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는 경기부양 계획을 발표
- 주택, 농촌인프라, 교통인프라, 환경위생시설, 재해복구, 산업고도화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저소득층 소득보조, 부가가치세 개편, 금융시스템 정비 등 10개 영역)
- 단기적 경기부양과 동시에 장기적인 성장동력 배양 및 균형발전 목표를 종합적으로 추구하는 계획

■ 수출지원 정책 실시

- 세계경기의 위축에 따른 수출산업의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11월 1일 3,486개 품목(전체 품목의 25.8%)에 대해 수출부가가치세 환급률을 인상하였고, 다시 11월 17일 3,770개 품목(전체 품목의 27.9%)에 대한 수출부가가치세 환급률 인상을 발표
- 이는 특히 섬유, 의류, 완구 등 노동집약적 중소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중국의 주력 수출분야인 기계 및 전자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됨.
- 가공무역을 제한하는 역할을 했던 '보증금 제도'를 12월 1일부터 잠정 중단

다. 2009년 경제 전망

■ 8% 성장을 목표로 한 경제운영

- 중국 정부는 2009년 8% 성장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각종 정책의 강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됨.
- 세계경기의 지속적인 둔화와 소비 및 투자 심리 위축에 따라 4분기 8% (예상)성장률에서 더 둔화될 가능성도 있으나, 4분기에 시행 및 발표된 각종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2009년 2분기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됨.
- 4조 위안의 경기부양 지출계획은 경기상황에 따라 그 실제 규모와 속도가 조절될 수 있음.
- 추가적인 금리인하 공간도 남아 있음(중국은 1997~99년 경기침체에 대출이자율을 8.64%에서 5.85%까지 인하한 사례가 있음).
- 주요 투자은행 및 전망기관들은 중국의 2009년 성장률을 7.2~8.7%로 전망하고 있으며, IMF는 11월 당초 전망 9.2%를 8.5%로 하향 조정하였고(11월), 세계은행 북경사무소는 종래의 8.5%에서 7.5%로 하향 전망

■ 수출증가율의 급격한 둔화와 환율 안정

- 중국의 수출증가율은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며, 2007년 25.7%에서 2008년 20%(10월 15.6%), 2009년에는 한 자릿수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세계은행은 2009년 중국 수출증가율을 실질 기준으로 3.5%로 전망
- 중국의 수출증가율은 아시아 경제위기 당시 1998년 0.5%, 1999년 6.1%를 기록한 바 있음.
- 2008년 3분기까지 30%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던 수입증가율도 수출증가율 둔화에 따라 하락하고 있으며 2008년 10월에는 15.6%를 기록
- 그동안 지속적으로 평가절상되어온 위안/달러 환율은 2008년 상반기에 6% 정도 절상되었으나, 하반기부터 6.8 위안/달러 수준에서 사실상 절상을 멈춘 상태이며, 2009년에도 수출둔화 등으로 인해 뚜렷한 절상기조를 보이기 어려움.

3) 11월 27일(목) 장핑(張平) 중국 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은 향후 2년동안의 4조 위안 경기부양책은 매년 1%p의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며 상세 계획을 발표. 농촌주택건설 부문에 2,800억 위안, 농촌 민생 및 기반시설 부문에 3,700억 위안, 철도·도로·공항·도농(도시와 농촌) 전력망 건설 부문에 1조 8,000억 위안, 의료·문화교육 부문에 400억 위안, 생태환경보호 부문에 3,500억 위안, 기술혁신 및 구조조정 분야에 1,600억 위안, 지진피해 복구 및 중점 피해지역에 1조 위안 투입 계획(『KorCham China』 뉴스레터, 2008.11.28).

■ 한국의 대중수출 둔화 가능성

- 중국의 수출둔화에 따른 중간재 수입 감소는 한국의 대중수출 둔화로 이어질 것이며, 이미 2008년 하반기 대중수출 증가율은 8월 19.4%, 9월 15.1%, 10월 -2.6%로 둔화 중⁴⁾
- 아시아 경제위기 및 IT 버블 붕괴 시기 한국의 대중 수출 증가율은 1998년 -12%, 2001년 -1.4% 등을 기록한 바 있음.
- 품목별로는 중국의 수출과 연동되는 중간재의 수출은 크게 둔화될 전망이나, 중국의 대규모 경기부양 투자 과정에서 소요되는 원자재 및 장비 수출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음.

연구진:

지만수 중국팀 팀장

(jmansoo@kiep.go.kr, Tel: 3460-1201)

4) 그러나 2008년 1~10월까지 누계로는 22.1% 증가하여 2007년 18.0%보다 오히려 수출증가율이 높아졌으며, 2008년 10월 증가율은 잠정치임.

2. 인도

가. 경제 동향

■ 실물경기 위축 현상 발생

- 세계금융시장의 불안에 따른 외국인들의 투자자금 회수와 신규투자 유보의 영향으로 인도의 산업생산 전반이 부진에 빠짐.
- o 특히 미국의 금융·보험 분야 진출로 빠른 성장을 이룩했던 IT 서비스 및 엔지니어링 업체와 건설업, 항공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08년 인도 기업들의 고정투자는 2007년의 절반 수준인 7.4%로 떨어지고 민간소비도 5%대에 그치는 등 하반기 경기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제성장률도 7%를 겨우 넘을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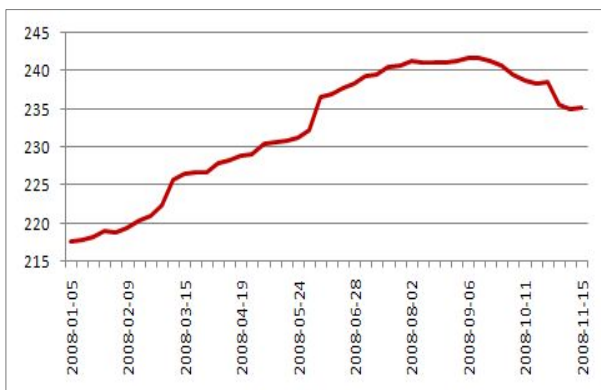
■ 대외경제 여건의 악화로 무역수지 악화

- 유가 상승으로 8월까지 490억 달러의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했으며, 유가가 하락한 하반기에는 수출수요가 대폭 감소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

■ 루피화 약세 지속

- 경상수지 적자와 외국인들의 투자자금 회수, 해외 영업자금 확보를 위한 인도 은행들의 달러 매입 등으로 인해 루피화의 달러대비 가치가 급락하여 11월 말에는 연초대비 1/5 수준에 불과한 달러당 50루피까지 추락했음.

그림 1. 인도의 물가동향 추이



주: 1993년도 100 기준.
자료: 인도 상공부.

그림 2. 인도의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 국제유가 및 곡물가의 하락으로 물가는 다소 안정

- 석유, 원자재 가격 상승과 루피화 가치 하락이 맞물리면서 9월까지 인도의 도매물가지수는 정부의 억제 목표치인 5.5%를 넘어 12.4%까지 급상승했으나, 하반기에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인도의 물가지수는 하향 안정세로 돌아섰음.

■ FDI 유입이 금융시장에서의 자본유출을 상쇄

- 2008년도 4~9월 동안 FDI 유입이 총 172.1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37%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결과, 금융시장에서의 대규모 자본유출(2008년 1~10월간 110억 달러 순매도)을 상당부분 상쇄하는 효과

나. 정책 현안 및 방향

■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정책 확대

- 인도 중앙은행은 10월부터 법정유동성비율 및 예금지급준비율 완화,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였음.
- 또한 환율방어를 위해 3월 이후 총 360억 달러를 시장에 매각하는 한편, 은행권에 대한 대출과 농촌대출상환 경감 및 면제 등에 총 1조 8,500억 루피(약 410억 달러)를 지원하여 유동성 공급 등 경기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FDI 유입 확대를 위한 추가 자유화조치 마련

- 인도 정부는 안정성이 높은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FDI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음.

표 1. 인도 정부의 주요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

날짜	정책목표	주요 조치
9/16	환율 방어	달러 매각 및 필요시 시장 개입 시사
10/6	환율 상승 및 주가하락 방지	FII에 대한 주식투자 사전등록제 및 역외파생상품 투자한도 폐지
10/13	유동성 제고	상업은행의 법정유동성비율 2%포인트 인하, 예금지급준비율을 두 차례에 걸쳐 기존의 9%에서 6.5%로 인하
10/20	유동성 제고	2004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9%에서 8%로 인하
10/22	외자유입 촉진	보험업에 대한 FDI 상한 26%에서 49%로 확대
10/23	외자유입 촉진	기업들의 대외사업차관(ECB) 연간 도입 상한선을 1억 달러에서 5억 달러로 확대

주: 법정유동성비율(SLR: Statutory liquidity ration)은 총 예금 중 정부의 채권 및 유가증권 등에 투자해야 하는 비율을 말함.

자료: 인도 중앙은행(RBI) 및 각종 보도자료 종합.

- 단일 브랜드 소매업은 100%, 멀티브랜드 소매업은 51%까지 개방 허용
- 주요 해외 신용정보회사는 49%까지 지분 허용 및 모기업 최대 주주의 지분이 10% 이하인 기업의 경우 진입 상한선 조정
- 그 밖에 인도 기업과 합작투자 형태로 진출한 외국 기업이 사업 확대시 파트너 인도 기업에게 ‘이의 없음’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 등 FDI 관련 행정적인 장벽도 완화하기로 함.

표 2. 2009년 인도 거시경제 전망

구분	EIU	Global Insight	IMF	OECD
실질GDP성장률(%)	6.1	5.7	6.3	7.3
소비자물가상승률(%)	6.7	7.1	6.7	6.0
경상수지(십억 달러)	-47.5	-31.4	-41.5	-2.0*
환율(연평균, 루피/달러)	47.00	49.17	-	-

주: *OECD의 경상수지 전망은 GDP 대비 비중임.

자료: EIU, Country Report: India(November 2008),
Global Insight, Global Insight Report: India(November 2008),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November 2008),
OECD, OECD Economic Outlook No. 84(November 2008).

다. 2009년 경제 전망

■ 2009년 경제성장률 6%대에 그칠 전망

- 인도경제는 금융위기의 실물경제 파급, 소비 및 투자 심리 위축, 루피화 약세 등의 이유로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경기둔화가 심화되어, 2009년에는 경제성장률이 6%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인도 정부의 다양한 조치는 아직까지 유동성 확대에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재정적자를 확대함으로써 국가신용등급을 하락시키고 재정운용 여력을 축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됨.

■ 경상수지 적자폭은 더욱 확대될 듯

- 유가상승분과 루피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수입액 확대, 해외송금액 감소 등으로 2009년 인도의 경상수지 적자는 최대 475억 달러(GDP의 3.8%)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2009년에도 대인도 FDI 유입은 꾸준히 증가할 듯

- 거시경제의 펀더멘털이 비교적 견조하고, 금융시장도 안정적이면서 개방 및 개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인도로 외국인들이 2009년에도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 다만 2009년의 변수는 5월 총선 이후 신정부가 FDI 자유화 기조를 유지하고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될 것임. 또한 이슬람 세력과의 충돌로 정국이 불안할 경우 투자 결정을 지연할 수 있음.

■ 2009년 5월의 총선이 향후 정국에 최대 변수가 될 것

- 현 UPA 연립정부가 경기침체, 물가상승 등으로 대중의 지지를 잃고 있는 가운데, UPA의 뒤를 이을 강력한 정당도 부재하여 차기에도 연합정부가 들어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음. 이에 따라 경제개혁이 지연되고 입장이 상이한 군소 정당들의 다양한 주장이 엇갈리면서 정국은 다소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있음.

- 한편 11월 26일 발생한 극우 이슬람 테러로 국교인 힌두교와 이슬람교 간의 마찰이 다시 부각되는 가운데, 12월로 예정된 카슈미르 주의회 선거에서도 이슬람 강경파 주도의 소요가 우려되고 있어, 정치불안 가능성이 있음.

■ 2009년 인도와의 FTA가 발효될 경우 한국의 대인도 수출은 예년 수준을 유지할 것

- 경기침체로 인해 인도 내수시장의 위축이 예상되나, 2009년에 한국과 인도 간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가 발효되면 한국의 대인도 수출은 적어도 예년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고관세 국가인 인도⁵⁾와 총 85%에 해당하는 교역품목의 개방이 예정되어 있어, 2009년부터 한국 수출기업들은 점진적인 자유화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2010년 개최 예정인 ‘Commonwealth Games’⁶⁾에 대비하여 인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델리 메트로 연장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 자재, 용품 수출이 가능한 것도 한국의 건설 및 플랜트 기업들에 호재가 될 전망이다.

연구진:

최윤정 동서남아팀 전문연구원

(yjchoi@kiep.go.kr, Tel: 3460-1039)

5) 2006년 기준 공산품의 양측 관세율을 비교하면, 한국이 6.3%인데 반해 인도는 13.9%에 달함.

6) ‘Commonwealth Games’는 영연방국들이 4년마다 개최하며, 올림픽과 같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기임.

3. 러시아

가. 경제 동향

■ 2008년 3분기부터 경제성장률 둔화

- 2008년 상반기에는 경기과열이 우려되었던 러시아 경제는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3분기 경제성장률이 6.2%로 뚜렷이 낮아졌음.
- 하반기에 경제성장 둔화가 본격화되면서 2008년 러시아 경제는 6.8~7.0%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표 1. 최근 러시아 경제 동향

	2007년	2008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¹⁾
경제성장률(%)	8.1	8.5	7.5	6.2	5.7
물가상승률(%)	7.0	12.9	14.9	14.9	13.6
산업생산지수(%)	6.3	6.3	5.5	4.7	3.7
고정자본투자(%)	21.1	19.1	13.0	9.9	13.2
경상수지(십억 달러)	78.3	37.5	26.2	27.6	-
외환보유고(십억 달러)	478.8	512.6	569.0	556.8	449.9 ²⁾
환율(루블:달러)	24.5	24	23	25	28

주: 1) 전년동기대비

2) 기간 내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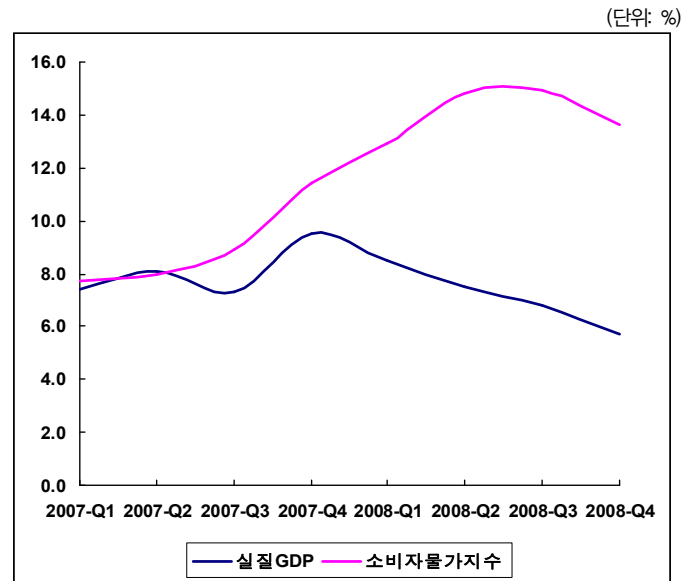
3) 기간평균

자료: 러시아 경제개발부.

■ 고정투자 및 수출 증가세 하락

- 기업의 고정자본투자 증가세가 3분기 들어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전체 산업생산 증가율도 둔화되었음.
- 전체 고정투자의 30%를 차지하는 채굴업 및 주택건설투자의 증가세 하락이 두드러졌는데, 1~9월간 주택건설투자는 2007년 25% → 2008년 8.6%로 하락함에 따라 10월 건설생산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8.2%p 하락하며 5.9%를 기록하였음.
- 또한 석유채굴업투자도 유가 하락폭이 컸던 7~9월간 증가율을 비교하면, 2007년 21.1% → 2008년 1.2%로 크게 하락하였음.
- 올해 하반기 이후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출액이 감소함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규모도 1분기 375억 달러 → 3분기 276억 달러로 감소하였음.
- 국제 우랄산 유가가 배럴당 9월 90~100달러 → 10월 70.5달러로 하락한 가운데, 10월 한달간 무역흑자 규모는 9월 164억 달러 → 10월 79억 달러로 52%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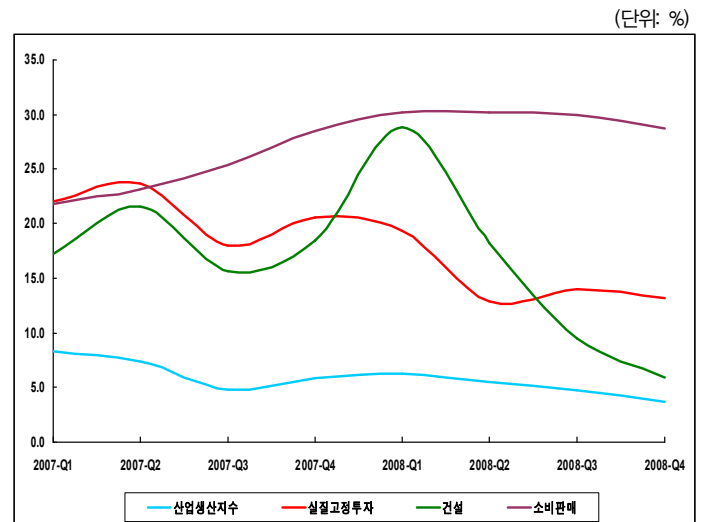
그림 1. 2007~08년 성장률 및 물가 추이



주: 2008년 4분기는 전망치임.

자료: 러시아통계청, Global Insight.

그림 2. 2007~08년 주요 경제지표 추이



주: 2008년 4분기는 전망치임.

자료: 러시아통계청, Global Insight.

■ 석유생산 감소세 지속

- 우랄산 유가가 배럴당 11월 21일 46.5달러로 크게 하락함에 따라, 주요 석유기업들이 석유생산을 감소하였으며, 당분간 감소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주요 기업의 2008년 1~10월간 석유생산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을 살펴보면, 로스네프트 3.7%, 루코일 -1.6%, 수르그트네프테가스 -4.6%, 가스프롬네프트 -5.2% 등으로 대부분 마이너스 증가세를 보임.

나. 정책 현안 및 방향

■ 은행 및 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 및 대출지원책 발표

- 지난 10월 러시아 정부는 △ 지급준비율 0.5%로 인하, △ 9,500억 루블의 후순위 대출, △ 최대 6개월간 무담보 대출지원, △ 500억 달러의 외환대출, △ 기업 세금 분할납부, △ 예금자보호 금액 70만 루블로 상향 조정 등 유동성 공급 및 대출지원책을 발표하였음.
- 시중은행에 대한 유동성지원을 위해 국가복지기금(National Welfare Fund)과 중앙은행을 통해 9,500억 루블(약 365억 달러)의 5년 기한 후순위대출을 지원함.
- 러시아 중앙은행은 대외경제개발은행(VEB)을 통해 은행 및 기업의 대외채무 상환을 위해 최대 총 500억 달러의 외환대출을 올해 연말까지 지원할 계획임.

■ 11월 푸틴 총리의 경제대책 발표

- 2008년 12월 1일부터 정부 산하기관, 특히 의료 및 교육기관 종사자의 임금이 30% 인상됨.
- 이를 위해 2009년 정부 예산에 1,141억 루블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음.
-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선 정책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국가 실업보조금을 증대할 계획임.
-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경제개발은행(VEB)을 통해 300억 루블을 지원할 예정이며, 2009년 1월 1일부터 국가 실업 보조금을 1,500루블 인상하여 월 4,900루블로 지급할 계획임.
-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600억 루블 규모의 주택 담보 대출을 지원하고, 주택 소유자(소유 예정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세제 혜택금액을 200만 루블까지 확대할 계획임.
- 이번 세제 혜택을 통해 1가구당 기존의 13만 루블에서 최대 26만 루블까지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음.

다. 2009년 경제 전망

■ 2009년 3~4%대의 경제 전망

- 세계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되는 2009년에는 국제유가 하락에 의한 수출소득 감소, 투자 위축 등으로 러시아 경제성장이 3~4%대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 재무부 장관은 지난 10월 우랄산 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선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지만, 세계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1월 말, 배럴당 50달러 선으로 하향 전망하였음.
- 여전히 두 자릿수의 인플레이션 압력과 루블화 평가절하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국제유가 하락과 함께 해외자본 유입도 매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환율은 올해에 비해 다소 평가절하되어 달러당 28~30루블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루블화 가치하락으로 인해 수입물가가 상승하고, 금융시장의 유동성 공급과 에너지가격 및 철도요금 자유화 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
- 금융불안과 경기둔화에 따른 기업들의 고용상황이 금융업을 중심으로 악화되면서 실업률은 2008년 5.9% → 2009년 6.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저소득층의 빈곤화 현상이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됨.
- 석유수출 소득의 감소와 추가재정지출이 예상되는 바, 재정수지 흑자는 2008년 GDP의 3.5% → 2009년 GDP의 0.6%대로 크게 낮아질 예상
- 2009년 경상수지는 무역수지 흑자의 감소와 자본수지 적자로 인해 2008년 1,000억 달러에서 2009년에는 약 400억 달러로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 최근 러시아 수출액에서 연료·에너지 자원의 비중이 70%에 달한 만큼 국제유가 하락은 무역수지 감소의 주원인이 될 것임.
- 대외채무 상환, 외국인투자 감소 등으로 내년 1,000억 달러 규모의 자본수지 적자가 예상됨.
- 주요 교역대상국의 경기침체, 물가불안에 따른 러시아 내수 감소가 예상되는바, 전체 대외교역 규모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표 2. 2009년 러시아 주요 경제지표 전망

	2009년	
	EIU	Global Insight
경제성장률(%)	3.7	4.2
물가상승률(%)	11.2	11.2
산업생산지수(%)	3.2	4.0
고정자본투자(%)	5.0	8.9
경상수지(십억 달러)	35.8	35

자료: EIU; Global Insight.

■ 한·러 양국의 실물경기 위축에 따른 교역 성장세 둔화 전망

- 2007년과 2008년 1~10월간 한국의 대러 수출 증가율은 2007년 56.2% → 2008년 36.5%, 대러 수입 증가율은 2007년 48.2% → 34.9%로 증가세가 둔화되었음.
- 2009년에는 한·러 양국의 경기 둔화로 인한 내수 감소 및 투자 위축이 예상되는바, 양국 교역 증가율이 둔화될 전망이다.
- 품목별(HSK 2단위 기준)로 살펴보면, 러시아의 고정투자 감소로 철도 및 차량(부속품), 전기기기 및 부품 등의 대러 수출 증가세가 매우 하락할 것이며, 한국 또한 내년 생산 감소로 인해 광물 성연료 등의 수입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연구진:

황지영 유럽팀 연구원

(hjydream@kiep.go.kr, Tel: 3460-10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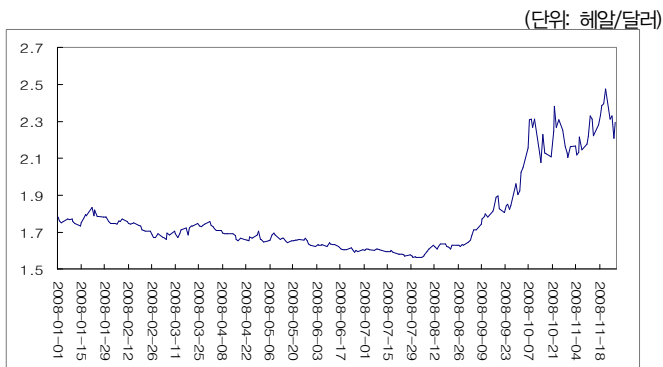
4. 브라질

가. 경제 현황

■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금융 및 외환 시장 혼란 증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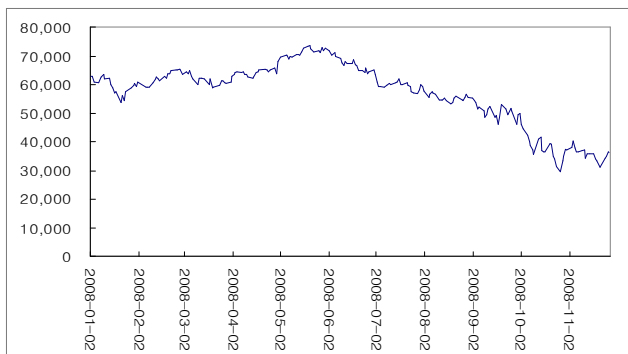
- 그간 제한적이었던 세계금융위기 여파가 9월부터 본격화되며 브라질의 금융 및 외환시장은 커다란 혼란을 거듭함.
- 주가(Bovespa)는 금년 5월 19일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서 11월 27일 현재 연초 대비 42.3% 하락했음.
- 2008년 8월말까지 강세를 보이던 달러대비 헤알화 가치도 9월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가 심화되며 11월 27일 현재 연초대비 30% 하락했음.
- 특히 글로벌 신용경색과 금융시장 혼란에 따른 국가위험도 상승으로 해외차입비용이 증가하며 브라질 기업들의 자금난이 가중됨.
- 연초대비 11월 27일 현재 브라질 국가위험도를 나타내는 EMBI + (JP모건 발표 신용시장채권지수) 가산금리는 117% 증가함.

그림 1. 브라질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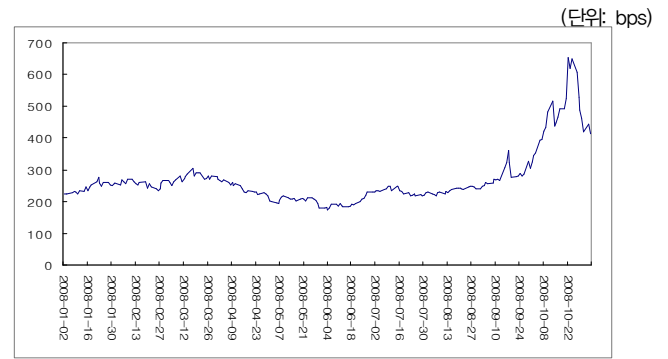
자료: IPEADATA.

그림 2. 브라질 주가(Bovespa) 추이



자료: IPEADATA.

그림 3. 브라질 국가위험도 추이



자료: IPEADATA.

■ 선진국에서와 달리 은행부문에 대한 영향은 아직까지 미미

- 금융시장 혼란이 선진국에서처럼 예금인출 사태나 은행파산 등 은행부문의 위기로 비화되지는 않음.
- 이는 브라질 은행들의 높은 건전성, 현재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는 첨단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부재, 브라질 은행들의 낮은 해외차입 비중에 기인함.
-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BIS비율은 브라질의 경우 18.7%(2007년)로 일본(12.9%), 미국(12.8%), 영국(12.6%), 프랑스(10.1%)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은 상황임.

■ 4분기 들어 실물경기 하락세 본격화

- 10월 수출은 미국 및 EU 등 선진권에 대한 뚜렷한 수출감소로 6개월 만에 최저치인 17% 증가에 그쳤음.
- 10월 대미 수출은 금년 들어 처음으로 0.5%(전년동월대비) 하락했으며, EU에 대한 수출도 1.6% 증가에 그침.
- 10월 자동차판매도 금년 들어 처음으로 8.6%(전년동월대비) 하락했으며, 제조업분야 월별 정규고용창출도 1999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함.
- 2008년 4분기 기업신뢰지수도 2005년 3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 무역흑자 감소로 경상수지 적자 심화

- 수출 증가세를 크게 상회하는 수입 증가로 2008년 1~10월 무역흑자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40% 감소한 208억 달러에 그침.

○ 금년 1~10월 수출은 품목별로는 1차산품, 지역별로는 아시아 등 개도국의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27.3% 증가한 1,694억 달러를 기록함.

○ 같은 기간 수입은 높은 소비 및 투자 증가세에 따른 수입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50.9% 늘어난 1,486억 달러를 기록함.

– 무역흑자 규모 감소와 브라질 진출 다국적기업들의 해외 이윤송금 급증으로 인해, 금년 1~10월 경상수지는 전년동기 35억 달러 흑자(GDP대비 0.32%)에서 248억 달러(同 1.86%) 적자로 돌아섬.

– 그러나 이 같은 경상수지 적자는 금년까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에 의해 충분히 보전할 수 있는 상황임.

○ 금년 10월까지 FDI 유입은 이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FDI 규모(346억 달러)를 상회하는 347억 달러에 달함.

■ 2008년 5%대 경제성장 전망

– 금년 브라질 경제는 상반기까지의 높은 성장세에 힘입어 지난해 보다 소폭 하락한 5%대 초반의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 브라질 경제는 1분기 5.9%(전년동기대비), 2분기 6.1%의 높은 성장세에서 3분기 4.6%, 4분기 3.9%(Global Insight 전망)로 성장세가 주춤할 전망이다.

나. 정책 현안 및 방향

■ 신용경색 해소를 위한 유동성 공급 확대정책 실시

– 브라질 중앙은행은 중소은행 및 리스기관(9.24), 대형은행(10.2) 기준을 인하조치를 통해 11월 말까지 약 505억 달러의 유동성을 공급함.

– 11월 16일에는 소득세(IR), 공업제품세(IIPI), 사회보장세(PIS/Cofins)의 지불 기간을 연장함.

■ 은행부문 파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 실시

– 10월 22일에는 신용경색에 따른 시중은행의 파산을 막기 위해 연방저축은행(Caixa Economica Federal), 브라질은행(Banco do Brasil) 등 국책은행의 시중은행 지분 매입을 허용했음.

■ 국제공조체제 구축

– 10월 29일에는 미국과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협정을 체결, 금융위기 전염효과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함.

표 1. 브라질의 금융위기 대응 주요 정책

정책	주요 내용
국제공조체제	– 미국과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협정 체결(10.29)
유동성 공급 확대	– 중소은행 및 리스기관의 기준을 인하(9.24) – 대형은행의 기준을 인하(10.2) – 소득세(IR), 공업제품세(IIPI), 사회보장세(PIS/Cofins)의 지불 기간 연장(11.16)
은행부문 파산대책	– 연방저축은행(Caixa Economica Federal), 브라질은행(Banco do Brasil) 등 국책은행의 시중은행 지분 매입허용(10.22)
수출금융 지원	– 1차 수출금융 지원(50억 헤알, 10.6) – 2차 수출금융 지원(100억 헤알, 11.6)
외국자본 유치	– 자본시장 투자, 해외차입 등에 대해 부과하는 금융거래세(IOF) 제로화(10.22) – 미달러화 자금 송금 확대 추진(달러화의 국내 송금에 대한 소득세 인하, 27.5% → 4~6%)
경기부양책	– 농업부문 신용 확대(50억 헤알, 10.1) – 건설업 금융 지원(30억 헤알, 10.29) – 농촌생산업자 금융 지원(10억 헤알, 11.5) – 중소기업 금융 지원(50억 헤알, 11.6) – 자동차기업의 소비자 신용 지원(40억 헤알, 11.11) – 건설자재 구입시 금융지원 한도 확대(11.11) – 가전제품(TV, 비디오 등) 및 가구 등에 대한 소매소비 금융 지원(20억 헤알, 11.12)
국부펀드 조성	– 66억 달러 규모

■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실시

– 브라질 정부는 수출업자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 지원을 늘리는 한편, 중소기업, 건설산업, 농촌기업을 위한 직간접적인 금융지원을 확대함.

– 또한 브라질 정부는 자동차 구매 소비자신용 확대, 가전제품 소비금융 확대 등 소비 진작을 위한 각종 조치를 실시함.

– 특히 11월 24일 룰라 대통령은 △ 대규모 인프라 개발계획인 성장촉진계획(PAC), △ 암염하층(Pre-Salt) 해역의 대규모 유전개발, △ 2014년 월드컵 준비 공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 2009년 4% 경제성장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함.

다. 2009년 경제 전망

■ 3% 전후의 경제성장률 전망

- 2009년 브라질 경제는 금융시장 혼란에 따른 신용경색과 이로 인한 소비 및 투자 위축, 1차산품의 수출하락 등 영향으로 2008년 5%대 성장에서 3% 전후의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 그러나 경기부양에 대한 룰라 대통령의 의지가 강해 브라질 경제가 일부에서 우려하는 경착륙에 직면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표 2. 브라질 경제 전망

(단위: %)

전망기관	2004~2007 평균	2007년	2008년	2009년
EIU	4.5	5.3	5.3	2.4
IMF			5.2	3.0
Global Insight			5.1	3.0
중앙은행			5.2	3.0

자료: EIU(11.13), IMF(11월), Global Insight(11.2), 중앙은행(11.21).

■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등 경제위기 발발 가능성은 희박

- △ 탄탄한 경제 펀더멘털과 일관된 시장지향 경제정책 추진, △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 구조, △ 수출구조의 다변성, △ 금융부문의 건전성 등에 힘입어 브라질 경제가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금융위기나 외환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FDI 유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브라질 경제의 불안정성이 가속될 것임.

○ 무역흑자 규모 감소 및 다국적기업들의 지속적인 이윤송금으로 경상수지 적자는 금년 286억 달러(GDP대비, 1.8%)에서 2009년 299억 달러(2.2%)로 확대될 전망이다.

○ 그에 반해 FDI 유입은 금년 360억 달러에서 2009년 220억 달러로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수출증가세도 둔화 전망

- 2004년부터 매년 두자리 수였던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수출증가율은 브라질 경제의 성장둔화로 2009년에는 둔화될 전망이다.
- 지난 4년간(2000~07년) 연평균 33.2%의 수출 증가세를 보여온 대브라질 수출은 2008년 들어 경우, 자동차, 평판디스플레이, 건설 중장비, 선박용 엔진 등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10월까지 93.9%의 급증세를 보임.
- 이에 따라 2008년 1~10월 수출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증가한 55억 달러, 무역흑자규모도 3배 증가한 20억 달러에 달함.
- 경제성장 둔화로 소비재 품목의 수출은 감소할 전망이나 브라질 정부의 유전개발 및 인프라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로 유전개발관련 장비, 건설플랜트 등의 수출은 지속적인 증가세가 예상된다.

연구진:

권기수 미주팀 전문연구원

(kskwon@kiep.go.kr, Tel: 3460-1081)

5. 멕시코

가. 경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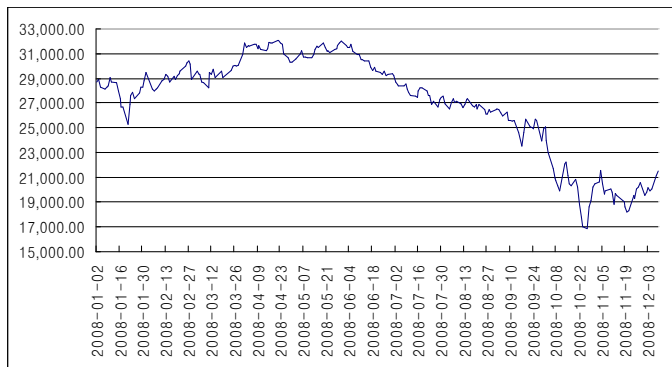
■ 멕시코 경제 침체국면 진입

- 공업생산증가율이 2008년 3월부터 마이너스로 진입하였고, 월별 GDP 전망지수인 IGAE도 3월에 이어 8월에 연 -0.3%를 기록함.
- 수출은 9월까지 전년동기대비 15.3% 증가했으나 8~9월 증가율이 전년동기(7%와 12%)보다 낮은 5%와 9%에 그쳐 최근 수출경기가 둔화국면에 진입했음을 반영함.
- 민간소비도 1/4분기부터 둔화되기 시작했는데, 소비자신뢰지수가 2007년 1월 이후 2008년 10월까지 22개월 연속으로 하락했다는 점에서 하반기에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 이 결과 3분기 GDP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7%로 상반기의 2.7%에 미치지 못하였고, 4분기에도 약 1% 수준으로 둔화가 예상되어 2008년 성장률은 2%에 그칠 전망이다.

■ 주식 및 외환 시장 불안정세 지속

- 2008년 6월부터 미국경제 불안정 가능성 반영으로 하락추세이던 주식시장은 미국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9월 중순 이후 급락했지만, 10월말 경에는 정부 개입으로 안정을 회복 중이었음.
- 주가지수는 유동성 확대방안으로 10월 28일 10.45%, 통화스왑라인 설정 발표일(10월 30일)에는 5.48% 상승했으나 11월 중에는 실물경기 침체 본격화로 등락 반복중임.

그림 1. 멕시코 주가지수(IPC) 동향(2008.1.2~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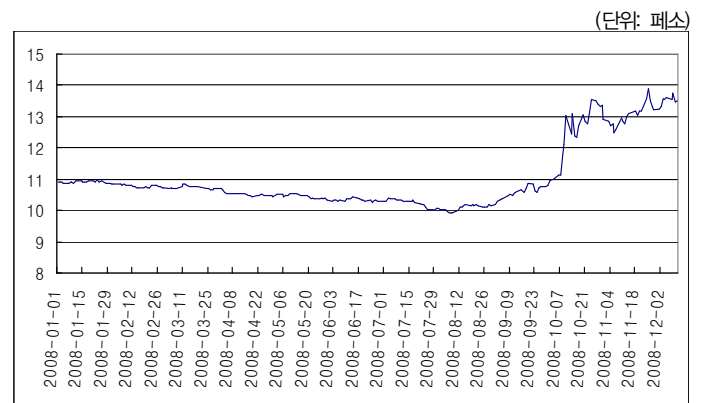
자료: 멕시코 통계청(INEGI)

- 외환시장도 주식시장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는데, 환율이 단기간

급등 이후 등락을 지속하다가 11월 중 경기침체 장기화 예상으로 다시 악화 중임.

- 8월 중 달러당 10페소이던 환율은 11월 25일 39% 상승한바, 1994년 페소화 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변동을 기록함.
- 고금리로 증가했던 對페소화 투자 회수, 미국경제와의 동조화 현상 심화, 해외동포 송금 감소 및 유가하락에 따른 외환수입 감소에 더하여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하여 150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한 멕시코 기업들의 외환수요 급증 결과 급격한 환율변동이 발생함.

그림 2. 멕시코 환율 동향(2008.1.1~1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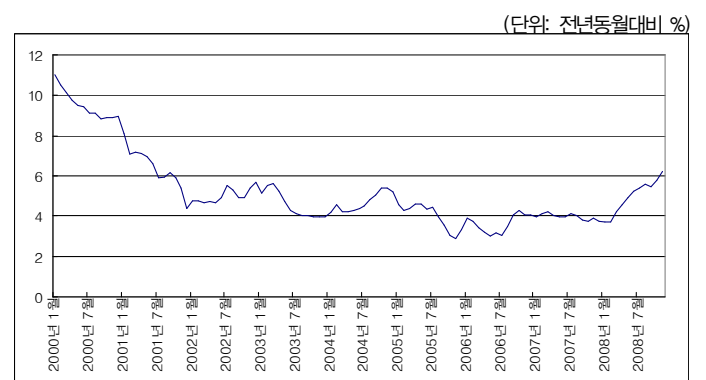


자료: 멕시코 통계청(INEGI)

■ 물가상승세는 완화될 전망

- 3%대에 머물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국제상품가격 강세 등을 바탕으로 2006년 하반기부터 4%대로 진입했다가 2008년 3월 이후에는 미국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 심화 및 이후 환율 급변으로 상승세를 유지함.
- 그러나 환율상승세 진정과 글로벌 경기침체, 국제상품가격 하락세로 인해 2008년 말 5.8%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로 반전될 전망이다.

그림 3. 멕시코 소비자물가 동향



자료: 멕시코 통계청(INEGI)

■ 고용상황 악화

- 멕시코 통계청에 따르면 실업률은 2007년 12월 3.4%에서 2008년 10월 4.1%로 다소 상승. 그러나 2008년 4분기부터 본격적인 글로벌 금융위기 및 실물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실업률이 2008년 말부터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노동사회복지부(STPS)의 10월 23일 하원 노동사회복지위원회 국정보고에 따르면, 경제위기로 인해 정부의 고용창출 목표 달성과 2012년까지 고용확대 추세 전환은 어려울 전망이다.

나. 정책 현안 및 방향

■ 중앙은행 정책금리 인하 전망

- 멕시코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과 실물경기 침체 심화에도 불구하고 2008년 들어 정책금리를 인하하기보다 인상 및 현상유지 기조를 유지해 왔음.
- o 이는 1994년 페소화 위기 이후 물가억제에 통화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 온 결과인데, 물가상승세가 반전될 것이라는 확실한 예측이 없는 한 고금리정책은 지속될 것임.
- 그러나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석유를 비롯한 국제상품가격의 약세가 지속된다면 환율상승에 따른 물가상승분을 보전하고도 남아 중앙은행의 고금리 기조는 2009년 상반기 중에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

■ 경기부양책 현실화

- 10월 8일 발표된 '경제성장 및 고용증진 프로그램'은 멕시코 정부의 확고한 경기부양 의지의 표현임.
- 기존의 경기부양정책과 차별성 부재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IMF 관리하의 과거와는 달리 정부 재정정책의 자율성과 의회의 협력을 기반으로 2009년 예산에 경기부양 재원을 충분히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o 2009년 지출예산은 경기부양정책 예산 반영으로 2008년보다 13.1% 증액되고, 재정적자도 2009년 경제정책 일반기준(CGPE09)의 균형재정에서 GDP대비 1.8%로 늘어났음.

다. 전망

■ 2009년 멕시코 경제, 저성장 기조에 물가안정세 전망

- 2009년 멕시코 경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하여 저성장이 예상됨.
- o 수출 감소, 송금유입 감소, 관광객 감소, 신용경색으로 인한 기업의 자금난 기증, 유가하락으로 인한 국가재정 감소 및 외화 유입감소 등 총체적인 어려움으로 1% 이하의 성장이 전망됨.
- o 멕시코중앙은행은 경제성장률을 2009년 1.5%에서 0.5%로 하향 조정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노동시장 불안을 반영하여 2009년 고용 목표치를 25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축소하였음.
- 금융시장 안정, 글로벌 경기침체와 국제상품가격 하락세로 인하여 2009년 물가는 예년 수준인 3%대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됨.

■ 한국-멕시코, 경기침체로 전반적인 교역 둔화 전망

- 2003~07년 5년간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과 수입증가율은 연평균 32%, 2008년 9월까지 수출은 41.8%, 수입은 12.6%를 기록했음.

표 1. 한국-멕시코 교역규모

(단위: 억 달러)

2004		2005		2006		2007		2008.9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29.9	4.1	37.9	4.6	62.8	7.9	74.8	10.1	74.3	8.3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그러나 2009년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교역이 전반적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 o 여기에 대멕시코 수출품목이 주로 대미시장 및 중남미 주변시장 수출을 위한 중간재이고, 수입품목이 수출품 제조 원료에 해당하는 동제품 및 아연광 등이라는 점에서 양국간 교역의 전반적 둔화 전망을 뒷받침함.
- 또한 중국에 적용하던 반덤핑 관세 철폐로 중국제품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어서 수출 둔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임.

■ 대멕시코 신규투자 및 재투자 위축 전망

- 대멕시코 투자규모가 2007년 1억 달러에 이어 2008년 1~9월에만 2억 달러를 상회하였으나 글로벌 경제위기가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신규투자 및 재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미국 자동차 메이저의 구조조정으로 한국 업체의 자동차산업 투자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도 있음.

표 2. 한국의 대멕시코 투자 현황

(단위: 천 달러)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누계
신고	69,635	27,442	37,334	85,721	117,031	228,188	260,509	1,152,088
투자	43,916	20,791	25,328	73,319	58,596	119,868	208,695	784,626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멕시코 FTA 협상 지연 전망

- 멕시코측 사정으로 인해 2008년 9월로 예정되었던 한국-멕시코 FTA 3차 협상이 열리지 못하고 있고, 지난 9월 24일 멕시코 산업상공회의소(Concamin)의 모든 추가적인 FTA 체결 반대 발표와 최근의 경제난은 향후 협상 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연구진:

김진오 미주팀 전문연구원

(jokim@kiep.go.kr, Tel: 3460-1085)

III. 개도국경제권

1. 동남아시아

가. 경제 동향

■ 경제성장률 둔화세

- 연초부터 지속된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내수 위축과 세계경제의 침체로 인한 수출 부진으로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2008년 들어 둔화됨.
- 특히 대외무역의존도가 3.14로 매우 높은 싱가포르의 3분기 GDP성장률이 5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4분기에는 하락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됨.
- 태국의 경우 정정불안이 지속된다면 GDP의 14%를 차지하는 관광산업의 피해와 외자이탈로 성장률이 4%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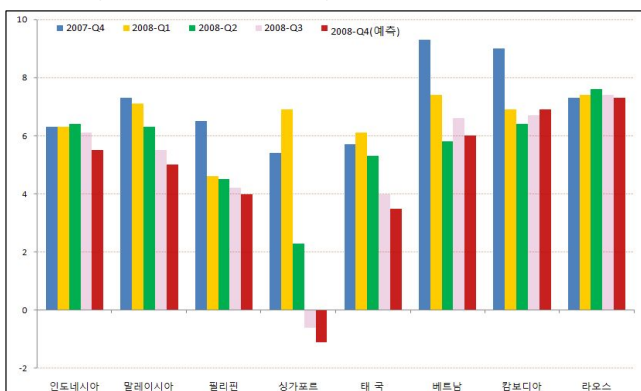
표 1. 동남아 국가들의 GDP성장률 추이 및 추정(2005~08년)

(단위: %)

	2006년	2007년	2008년 추정
인도네시아	5.5	6.3	6.0
말레이시아	5.8	6.3	5.7
필리핀	5.4	7.2	4.4
싱가포르	8.2	7.7	2.7
태국	5.1	4.8	4.5
베트남	8.2	8.5	6.3
캄보디아	10.8	9.6	6.7 ¹⁾
라오스	8.3	7.5	7.4 ¹⁾
미얀마	9.4	5.3	2.1 ¹⁾
브루나이	5.1	3.3	3.0 ¹⁾

주: 1) Global Insight.
자료: IMF

그림 1. 동남아 국가들의 최근 분기별 GDP 성장률 추이 및 예측(2007. 4/4~2008. 4/4)



자료: Global Insight와 각국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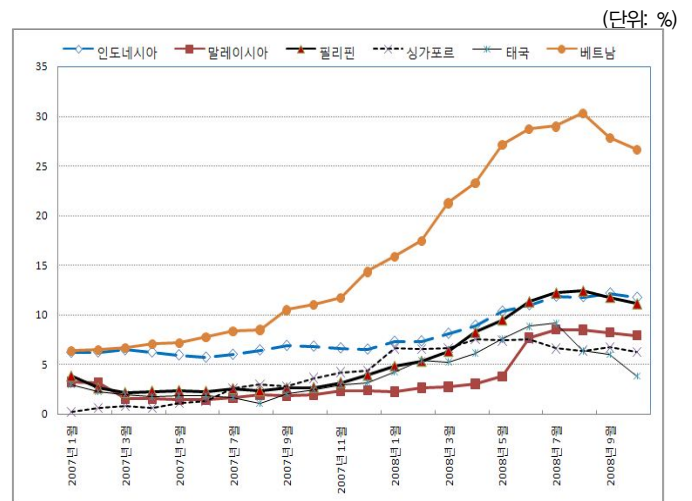
■ 국제 유가 및 곡물가 하락의 영향으로 물가상승률 하락

- 2007년 하반기 이후 지속된 급속한 물가상승세가 2008년 하반기 들어 국제유가와 곡물가 하락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완화되기 시작함.
- 특히 세계 1, 2위 쌀 수입국인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서는 곡물가 상승으로 인해 2008년 상반기 동안 심각한 물가불안 사태가 도래하기도 했음.

■ 미국발 금융위기 본격화 이후 통화가치 하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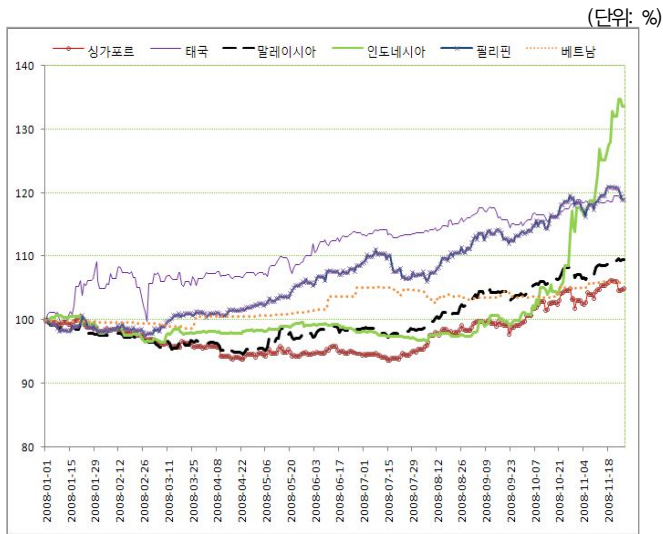
- 9월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동남아 주요 국가 화폐의 대미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함.
- 11월 27일 현재 바트(Baht)화와 페소(Peso)화는 연초대비 19%, 링깃(Ringgit)화는 9%, 싱가포르 달러화와 베트남 동(Dong)화는 5% 절하됨.
- 연초에는 안정된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가치가 상승하던 인도네시아 루피아(Rupiah)화도 9월 이후에는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함.

그림 2. 동남아 주요국의 최근 월별 물가상승률 추이(전년동기대비, 2007.1~2008.10)



자료: Bloomberg.

그림 3. 동남아 주요국 통화의 2008년 對달러 환율 변화 추이(2008. 1. 1=100.0)



자료: Bloomberg.

■ 베트남을 제외하면 외자유입 저조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은 유가 하락으로 중동자금 및 이슬람 자금의 유입이 줄어들고 있고, 해외노동자 송금이 많은 필리핀은 50% 정도를 차지하는 미국으로부터의 송금이 크게 감소하고 있음.
-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에는 2008년 들어 외국인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10월말 현재 2007년 전체의 3배에 해당하는 583억 달러(승인 기준)를 기록함.

나. 정책 현안 및 방향

■ 금리인하보다는 유동성공급과 예금보장정책에 중점

- 동남아 국가들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수입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금리인하보다는 유동성공급 확대와 예금보장에 중점을 둔 금융위기 대책을 실시함.
- 강력한 물가억제책으로 고금리를 지속했던 말레이시아와 베트남만이 기준금리를 인하함.

■ 경기부양책과 빈곤층 지원책 실시

- 물가상승률이 비교적 낮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은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였고 필리핀은 빈곤층 지원책을 발표함.
- 싱가포르는 미국 FRB와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함.

표 2. 동남아 주요국의 금융위기 대응정책(2008년 10월 이후)

인도네시아	○ 한시적(10월) 공매도 금지 ○ 상장기업 자사주 매입한도 납입자본금 확대(10%→20%) ○ 은행예금 보장한도 확대(1억→20억 루피아) ○ 중앙은행, 상업은행의 대출담보물 범위 확대 ○ 예금지급준비율 158bp 인하 ○ 루피아 표시채권 발행 규모 1/3 축소
말레이시아	○ 2010년 말까지 국내외 통화 은행예금 전액 지급보장 ○ 중앙은행, 유동성 공급대상에 보험사 포함 ○ 70억 링깃(20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책 발표 ○ 중앙은행, 기준금리 5년 만에 인하(3.5%→3.25%, 11월 24일)
필리핀	○ 중앙은행, 금융권에 40억 페소 유동성 공급 ○ 중앙은행, 환매조건부채권 매입으로 유동성 확대 ○ GDP 1.5% 규모(20.6억 달러) 빈곤층 지원책 발표
싱가포르	○ 통화정책기조 완화 및 GDP 3%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계획 발표 ○ 2010년 말까지 국내외 통화 금융기관예금 전액 지급보장 ○ 미국 FRB와 통화스왑협정 체결(300억 달러 및 2009년 4월 30일 기한)
태국	○ 2011년 8월까지 국내외 금융기관의 국내예금에 대한 예금지급 보장 확대 ○ 2008 회계연도(2008. 10~2009. 9) 추가예산 1,000억 바트 편성 ○ 주식시장 안정화, 인프라 확충, 관광중소기업 지원 등 경기부양책 발표
베트남	○ 기준금리 3차례(10월 21일, 11월 5일과 21일) 1%포인트씩 인하 ○ 정부 채권(12억 7,000만 달러)에 대한 담보 인정 ○ 은행 및 외환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율 인하 ○ 은행 요청시 중앙은행채권(만기 1년) 환매 결정

자료: 필자 정리

다. 2009년 경제 전망

■ 세계경제 침체에 의한 수출둔화로 경제성장률 하락 전망

- 싱가포르 2% 미만,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3%대,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4%대, 베트남 5%대 등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인도네시아는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둘러싼 혼란과 루피아화 불안정, 말레이시아와 태국의 경우는 지속되는 정정불안, 싱가포르는 금융산업 침체 및 비석유류 수출(NODX) 급감,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고물가의 지속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2009년 경제성장의 추가적인 장애요인이 될 것임.

표 3. 동남아 국가들의 2009년 GDP성장률 전망

(단위: %)

국 가 명	GDP 성장률	
	IMF	Global Insight
인도네시아	4.5	4.5
말레이시아	3.8	3.7
필 리 핀	3.5	3.8
싱가포르	2.0	0.5
태 국	4.0	2.9
베 트 남	5.5	5.8
캄보디아	n.a	4.7
라 오 스	n.a	7.0
미 얀 마	n.a	4.1
브루나이	n.a	2.3

자료: IMF(2008. 11), Global Insight(2008. 11)

■ 2009년에도 높은 물가수준은 지속될 전망

- 현지통화 약세에 의한 수입물가 상승과 보조금 삭감에 따른 유류 가격상승 등의 요인이 상존하여 동남아 국가들의 물가수준은 2009년도에도 2008년 이전의 수준으로는 내려가지 않을 전망이다.

■ 수출확대는 선진국 국가들의 경기회복이 관건

- 동남아 국가들의 주력 수출품인 IT 및 전기전자제품, 자원 및 곡물에 대한 선진국의 수요 회복이 동남아 국가들의 수출확대에 관건이 될 것임.

■ 한국의 대동남아 수출 및 투자 부진 전망

- 최근 수년 동안 빠르게 확대된 한국의 대동남아 수출증가율이 2008년 말부터 둔화되기 시작했는데, 2009년에는 이러한 둔화세가 더 뚜렷해질 전망이다.
- 한국 기업들의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신규 투자진출 역시 부진할 것이며, 이미 진출한 기업들의 경영여건도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연구진(동서남아팀):

* 국번: (02) 3460

정재완 전문연구원 (jwcheong@kiep.go.kr, Tel: 1051)

이재호 연구원 (jhlee@kiep.go.kr, Tel: 1134)

2. 중남미

가. 경제 현황

■ 글로벌 금융위기로 금융 및 외환시장 혼란 지속

-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중남미 각국의 주가와 통화가치가 예외 없이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 혼란이 증폭됨.
- 11월 26일 현재 연초대비 주가는 페루(57%), 아르헨티나(56%), 브라질(42%), 콜롬비아(32%), 멕시코(30%) 순으로 하락했으며, 달러대비 통화가치도 칠레(33%), 브라질(24%), 멕시코(21%), 콜롬비아(15%) 순으로 급락함.
- 특히 글로벌 신용경색과 금융시장 혼란에 따른 국가위험도 상승으로 해외차입비용이 증가하며 중남미 국가들의 자금난이 가중됨.
- 연초대비 11월 26일 현재 중남미 각국의 국가위험도를 나타내는 EMBI+(JP모건 발표 신용시장채권지수) 가산금리는 아르헨티나(325%), 베네수엘라(188%), 멕시코(178%), 브라질(122%) 순으로 크게 증가함.

■ 수출 증가세 둔화로 경상수지 악화

- 미국의 경기침체에 따른 해외수요 감소와 1차산품의 가격 급락으로 그간 중남미 경제성장을 견인해왔던 수출이 2008년 하반기부터 증가세가 주춤하거나 하락세로 돌아섬.
- 특히 수출 증가세 둔화는 미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거나 단일 상품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등에서 현저하게 나타남.
- 이 같은 수출 증가세 둔화에 따른 무역흑자 감소로 2008년 들어 브라질, 칠레, 페루 등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에서 경상수지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됨.

■ 멕시코와 중미지역에 대한 해외송금 유입 감소

- 미국 등 해외 거주 중남미인들의 본국 송금은 중남미 국가들의 주요 외화수입원인으로, 특히 멕시코와 중미국가들의 경우 해외송금 유입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임.
- 미국의 경기침체로 멕시코의 2008년 1~8월 해외송금 유입액은

전년동기대비 4% 감소했으며, 중미 국가 중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의 송금 유입도 감소세로 돌아섬.

■ 2008년 경제성장은 4%대 초반 전망

- 글로벌 금융위기는 신용경색, 해외수요 감소, 1차산품 가격 하락, 해외송금 유입 감소 등의 경로를 통해 2008년 3분기부터 중남미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침.
- 그러나 2008년 중남미 경제는 상반기까지의 양호한 경제실적에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남미 국가들의 성장세에 힘입어 4%대 초반의 안정적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 국별로는 페루(9.1%), 아르헨티나(6.2%), 베네수엘라(5.4%), 브라질(5.3%) 등 남미국가들이 중남미 평균 경제성장세를 상회할 전망이다.

나. 정책 현안 및 방향

■ 글로벌 금융위기 전염효과 차단을 위한 다각적 대응책 강구

- 금융시장 혼란 차단을 위해 중남미 각국은 유동성 공급 확대, 중소기업 금융지원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함.
- 칠레는 중소기업 및 중산층에 대한 모기지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영은행(Banco Estado)의 대출을 대폭 늘렸으며, 페루도 국영은행(Banco de la Nacion)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건수를 2배 확대했음.
- 특히 아르헨티나의 경우 지난 10월 21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300억 달러 규모의 민간연기금사를 국유화하기로 결정함.
- 국제금융기관들도 중남미 국가들의 유동성 부족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함.
- 중남미지역의 대표적인 개발은행인 안데스개발공사(CAF), 미주개발은행(IDB), 중남미준비기금(LARF)은 중남미 금융기관에 총 93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음. 특히 IDB는 2009년 중남미지역에 대한 대출규모를 120억 달러로 대폭 확대할 계획임.
- 국제금융공사(IFC)와 세계은행도 각각 20억 달러, 10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함.

■ 대대적인 경기부양책 실시로 경제 연착륙 유도

-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해지면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등을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은 각종 경기부양책을 실시, 경제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음.
- 그 중에서도 특히 아르헨티나 정부는 내수침체를 막기 위해 11월 초 공공사업 확충, 제조업 금융지원, 소비자 신용대출 확대 등을 포함한 13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한 데 이어,
 - 11월 25일에는 △ 710억 페소(약 212억 달러) 규모의 공공사업 투자 계획, △ 신규 고용 창출이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 △ 해외 거주자들의 본국 송금시 각종 혜택부여 등의 추가적인 대책을 발표하는 등 가장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실시함.

다. 2009년 경제 전망

■ 글로벌 경기침체로 경제성장세 둔화 전망

- 금융시장 혼란에 따른 신용경색과 유동성위기, 해외수요 감소 및 1차상품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하락, 해외거주 중남미인들의 송금 감소 등 세계 금융위기의 전염효과가 보다 뚜렷이 나타나며 중남미 경제의 성장 둔화는 가시화될 전망이다.
- 이에 따라 2009년 중남미 경제는 2008년의 절반 수준인 2%대의 성장에 머물 전망이다.

■ 지역별로 멕시코와 중미국가들의 경기하락 현저

- 지역별로는 수출 및 해외송금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멕시코와 중미국가들의 경기하락이 보다 현저할 전망이다.
- 특히 미국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멕시코의 경우 2009년 경제성장률은 중남미 평균 성장률을 크게 하회하는 1% 미만에 그칠 전망이다.

표 1. 중남미의 대미 및 1차상품 수출의존도, 해외송금 의존도 현황

분류	국가
대미 수출의존도 (07년, 총수출대비)	멕시코(75.9%), 도미니카공(67.1%), 엘살바도르(47.3%), 베네수엘라(42.4%), 과테말라(39.6%), 콜롬비아(28.5%), 코스타리카(24.9%), 브라질(14.1%), 칠레(12.5%), 아르헨티나(7.4%)
1차상품 의존도 (03~06년 평균, 총수출대비)	베네수엘라(96%), 페루(69%), 아르헨티나(59%), 칠레(58%), 콜롬비아(53%), 브라질(42%), 멕시코(15%)
해외송금 의존도 (07년, GDP대비)	온두라스(20.8%), 엘살바도르(18.1%), 니카라과(12.9%), 과테말라(12.3%), 콜롬비아(2.6%), 코스타리카(2.5%), 멕시코(2.3%)

자료: EIU Viewswire, IMF, Global Insight 자료를 토대로 작성.

■ 1차 상품 수출 감소로 남미국가들의 경제성장세도 둔화

- 남미국가들의 경우 비교적 수출시장이 다변화되어 있어 미국 등 선진권의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1차상품의 국제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 감소로 경제성장 둔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2001년 경제위기 이후 농산물 수출 붐과 재정지출 확대로 고성장세를 구가해오던 아르헨티나 경제는 1차상품 가격 급락과 주력 수출대상지역인 EU경제권의 경기침체로 2%대의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 석유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베네수엘라와 에콰도르 경제도 경착륙이 예상되는데, 특히 베네수엘라 경제는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 칠레 경제도 신용경색에 따른 투자 및 소비위축, 최대 수출품인 동(銅) 가격 급락의 영향으로 2%대 성장세에 머물 전망이다.

■ 기초경제여건 강화로 과거보다 금융위기 발발 가능성은 낮음.

- 그간 건전한 거시경제 및 금융정책 운영, 해외차입 의존도 축소 등을 통해 기초체력을 강화한 중남미 경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외환 및 금융위기로 비화될 가능성은 과거보다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다만 해외차입의존도가 높고 정부부채가 과다한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자메이카 등 일부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 채무상환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지속적인 디폴트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에콰도르의 경우 이미 2008년 11월 14일 외채 이자에 대한 지불을 연기함으로써 중남미 국가 중 처음으로 디폴트 상황에 직면함.

표 2. 중남미 경제성장 전망

(단위: %)

	2004~07 평균	2008	2009
아르헨티나	8.9	6.2	2.2
브라질	4.5	5.3	2.4
칠레	5.3	3.9	2.8
콜롬비아	6.2	3.4	2.8
멕시코	3.8	1.8	0.9
페루	7.1	9.1	5.5
베네수엘라	11.8	5.4	-3.0
중남미	5.3	4.2	2.2

자료: EIU Viewswire(2008.11.21).

■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수출 증가세 둔화 및 신규투자 진출 자체 불가피

- 중남미 경제의 성장세 둔화는 그간 중남미 경제의 고성장세에 힘입어 크게 증가해왔던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지난 4년간(2004~07년) 대중남미 수출은 연평균 31% 증가했으며 2008년 들어 10월까지도 그 증가세(35%)는 지속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수출이 현지 수입수요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데다 일부 품목에 대한 편중도(10대 수출품목 비중 80%, 2007년)가 높은 등 중남미 경제의 부침에 변동이 심한 구조를 갖고 있어 중남미 경제성장 감속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 또한 세계 금융위기와 중남미 현지 경기둔화로 우리기업들의 중남미 신규 투자진출이나 기존 투자확장도 지체될 가능성이 큼.

- 2008년 들어 9월까지 대중남미 투자는 멕시코, 파나마 등에 대한 투자 증가로 사상 최고치인 약 14억 달러에 달함.

연구진:

권기수 미주팀 전문연구원

(kskwon@kiep.go.kr, Tel: 3460-10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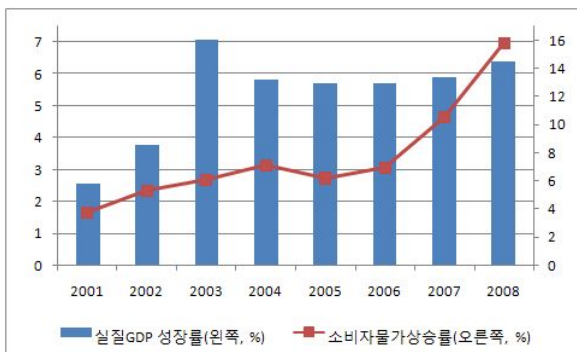
3. 중동

가. 경제 동향

■ 국제유가의 급등락으로 경기과열에서 경기둔화세로 반전

- 세계적 고유가시기가 본격화된 2003년 이후 막대한 오일머니의 유입으로 중동경제는 2008년 상반기까지 경기활황세를 지속해 왔음.
- 막대한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역내 투자 및 소비가 큰 폭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동경제는 연간 5~7% 수준의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함.
- 특히 2007년부터 주요 산유국을 중심으로 경기가 과열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해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이 급등함.
- 역내 경기과열과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07년 이후 연간 9~13%에 이르렀으며,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부동산 가격은 매년 10~20%씩 상승함.
- 하지만 2008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급락함에 따라, 부동산 및 주식 등 자산가격이 하락하고 투자가 위축되는 등 경기는 급속한 둔화세로 반전됨.

그림 1. 중동지역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주: 2008년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추정치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B(2008.10); Bloomberg(2008.11.27).

그림 2. 중동 GCC 6개국 평균 주가지수 추이



주: 2008년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추정치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B(2008.10); Bloomberg(2008.11.27).

■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부동산대출 부실화 우려 대두

- 2008년 9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역내 주식시장 급락과 금융기관간 신용경색 확산과 같은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11월 말 현재, GCC 국가의 평균 주가지수는 연초대비 51.0% 하락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주가지수는 연초대비 58.7%, UAE 두바이 주가지수는 67.5%, 쿠웨이트 주가지수는 30.5% 하락함.
- 중동 신용경색의 주요 진원지는 부동산 관련 금융시장으로, 투자자본 이탈 및 부동산 관련 대출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역내 금융시장 불안이 촉발됨.
- 최근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였던 만큼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버블붕괴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글로벌경기침체와 맞물려 역내 부동산시장에 대한 투자자금 이탈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중동 금융기관의 신용경색과 금융자산에 대한 위험노출(exposure)이 가중됨에 따라 중동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고조됨.
- 실제 쿠웨이트 2위 은행인 Gulf Bank의 경우 자산부실화를 우려한 고객들의 대량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UAE 두바이 정부는 부동산 모기지시장 안정을 위하여 자국 1, 2위 모기지 회사의 합병을 추진 중임.

나. 정책 현안 및 방향

■ 각국 정부의 잇따른 금융시장 안정화대책 발표

-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중동 산유국 정부들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국제적 공조체제하에서 기준금리 인하와 유동성공급, 예금 지급보증 등 잇따른 대책을 내놓고 있음.

표 1. 중동 주요 산유국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화대책

국명	금융시장 안정화대책
UAE	- 9월 22일, 자국은행에 대한 136억 달러 유동성 공급계획 발표 - 10월 8일, REPO 금리를 1.5%로 0.5%p 인하 - 10월 12일, 은행예금(외국은행 포함)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 및 190억 달러의 추가 유동성 공급계획 발표
사우디 아라비아	- 10월 12일, 정책금리를 5%로 0.5%포인트 인하 및 시중은행 지급준비율을 13%에서 10%로 3%포인트 인하
쿠웨이트	- 10월 8일, 환매조건부채권금리(REPO rate) 2.5%로 1%포인트 인하 - 10월 18일, 고객예금 지급보증 조치 발표 - 10월 30일, REPO 금리를 2.0%로 0.5%p 추가 인하

자료: 언론보도를 토대로 필자 작성.

■ 경기둔화에 대응하여 재정확대 기조 유지 전망

- 주요 산유국 정부는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정부지출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확대할 계획임.
- 중동지역 경제대국인 사우디 정부는 2009년에도 재정확대 기조를 유지하여 정부지출을 늘리고, 국제유가의 추가 하락으로 재정적자가 발생할 경우 전년도 재정흑자 잉여금을 활용할 계획임.
- 사우디 정부는 2009년도 기준유가를 배럴 당 50달러 수준으로 가정하여 예산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짐.
- 한편 UAE 정부도 2009년도 정부지출 규모를 전년대비 20% 가량 확대하여 민간부문의 투자위축을 상쇄할 계획임.
- 산유국 정부는 최근 5년간 고유가로 막대한 오일머니를 축적하고 2조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를 운영하고 있어 재정확대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상황임.

■ 국제유가 지지를 위한 원유생산량 축소 전망

- 중동 산유국들은 OPEC 쿼터축소 등을 통해 국제유가 지지를 시도하겠지만 원유생산 쿼터축소에 대한 회원국간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사우디 정부는 배럴당 75달러가 적정 유가수준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나 사우디의 예상대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GCC의 통화동맹 및 대외개방 지속 추진 전망

- 세계경제의 보호주의 도래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동 GCC 국가는 단일통화 도입 및 FTA 추진 등 시장통합 및 개방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중동 걸프지역 주요 산유국들로 구성된 GCC는 2010년 단일통화 발행을 목표로 통화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목표기간 내 단일통화 발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GCC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EU, 중국, 일본, 인도,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 중인데, 이러한 시장개방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다. 중동경제 및 한-중동관계 전망

■ 국제유가 하락으로 성장률 하락 불가피

- 세계적 불황과 석유수요 둔화로 2009년에는 국제유가가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동의 경제성장률 역시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임.
- 두바이 유가는 2008년 연평균 80달러대에서 2009년에는 연평균 40달러대로 50% 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국제유가와 중동지역 성장률 간 관계를 고려할 때 국제유가의 하락이 오일머니의 유입감소와 민간의 투자지출 감소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됨.
-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어려움과 신용경색으로 다수의 개발프로젝트가 축소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
-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정부지출을 확대하고 국부펀드 중 일부를 경기진작에 사용할 수도 있지만, 유가하락의 충격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됨.
- 중동국가의 금융시장 안정화조치와 외환보유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금융부문의 위기 심화 가능성은 낮지만, 부동산개발 등 자산시장의 침체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 2009년 성장률은 4%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

- 세계경제 불황과 국제유가의 급락을 고려할 때 2009년도 중동지역 경제성장률은 4%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큼.
- IMF는 최근 2009년도 중동지역 경제성장률을 5.9%에서 5.3%로 하향 조정했지만 국제유가 하락과 세계경제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어 더 큰 폭의 성장률 하락이 예상됨.
- World Bank가 2008년 12월 현재 2009년도 중동지역 경제성장률을 3.9%로 전망한 것을 감안할 때 IMF 역시 2009년도 중동지역 성장률을 추가 하향 조종할 가능성이 큼.
- 중동의 2009년도 경상수지 흑자폭은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수출 감소로 인해 전년도의 30~40%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됨.
- 중동의 주요 경제현안이었던 물가상승 압력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여전히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임.

표 2. 중동지역 실질경제성장률 전망

실질GDP성장률 (%)						물가상승률 (%)		경상수지 흑자 (억 달러)	
IMF		World Bank		Global Insight		Global Insight		Global Insight	
2008	2009	2008	2009	2008	2009	2008	2009	2008	2009
6.1	5.3	5.8	3.9	6.6	3.8	12.8	8.8	3,417	1,380

자료: IMF(2008, 11); Global Insight(2008,11); World Bank(200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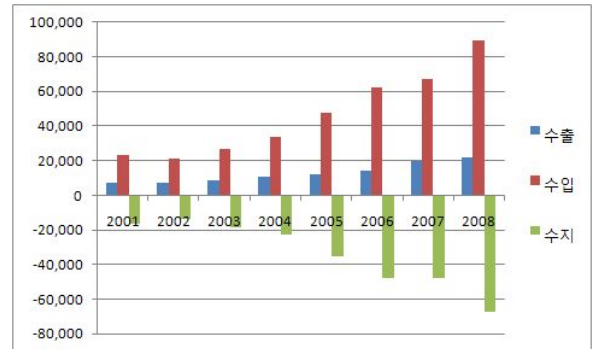
■ 한국의 대중동 수출세 둔화는 불가피하나 수입은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

-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대중동 무역수지적자 규모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중동 수출 증가세 역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08년 10월 말 기준 대중동 수입액은 895억 달러(전체 수입의 23.6%)로 전년동기대비 69%가량 급증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수입액이 약 150~200억 달러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의 2008년도 대중동 수출금액(10월 말 현재)은 22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8% 증가했으나 내년에는 중동시장의 경기 부진으로 수출 증가율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음.

○ 하지만 타 지역에 비해 수출 감소폭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에 수주한 플랜트 관련 수출 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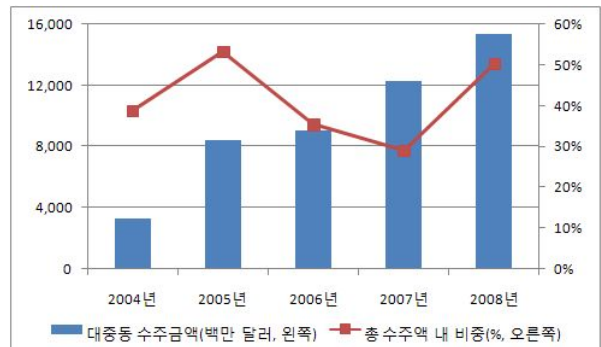
- 중동은 우리나라 플랜트 수주의 50%(2008년 10월 말 현재 약 153억 달러)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시장이지만, 2009년에는 현지 시장의 투자부진으로 수주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그림 3. 한국의 대중동 수출입 추이



주: 2008년 대중동 수출입금액 및 플랜트 수주금액은 10월 말까지의 실적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플랜트협회.

그림 4. 대중동 플랜트 수주금액 및 비중 추이



주: 2008년 대중동 수출입금액 및 플랜트 수주금액은 10월 말까지의 실적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플랜트협회.

연구진(아중동팀):

* 국번: (02) 3460

박복영 팀장 (bypark@kiep.go.kr, Tel: 1149)

박철형 연구원 (chpark@kiep.go.kr, Tel: 1092)

4. 아프리카

가. 경제 동향

■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은 제한적

- 글로벌 금융위기에 불구하고 2008년 아프리카의 경제성장률은 5.5%로, 지난 5년간 이어온 5~6%대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아프리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덜 받고 있는데, 이는 아프리카의 자본시장이 영세하고 국제금융시장과의 연계성이 낮기 때문이다.
- 2008년 4분기부터 해외송금 유입 감소, 수출 및 FDI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프리카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임.

■ 산유국이 경제성장 주도

- 나이지리아, 앙골라, 적도기니 등 산유국들은 △ 원유수출 증대, △ 정정안정, △ 외국인투자 확대 등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 이에 반해, 남아공과 케냐를 비롯한 비산유국들은 물가상승,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정정 불안 등으로 인한 경제침체를 겪고 있음.
- 2010년 월드컵 개최국이자 아프리카 최대 경제부국인 남아공은 정치 갈등, 전력난, 물가 폭등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 과거 아프리카의 모범국이었던 케냐 역시 2007년 대선에 따른 유혈사태의 영향으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음.

■ 물가안정, 경상수지 적자폭 감소

- 2008년 상반기에는 고유가와 생필품의 가격상승으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했으나, 최근에는 유가급락과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안정 정책에 힘입어 안정세로 돌아섰음.
- 경상수지는 광물자원과 농산물 등 1차산품의 수출 증가로 인해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음.

표 1. 아프리카의 주요국의 경제지표

	실질GDP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경상수지/GDP (비중, %)		
	1999 ~2006	2007	2008e	1999 ~2006	2007	2008e	1999 ~2006	2007	2008e
아프리카	4.9	6.8	5.5	10.0	7.2	11.9	-1.5	-3.0	-0.6
나이지리아	5.2	6.3	6.2	19.5	5.4	10.3	12.1	14.9	26.3
남아공	4.5	5.1	3.6	6.1	7.1	11.7	-1.8	-7.3	-7.7
케냐	3.0	6.7	3.5	11.8	9.8	25.9	-1.2	-5.8	-6.1
앙골라	13.2	21.1	15.0	-	12.2	12.2	0.8	16.4	12.8
콩고민주	1.7	6.6	7.3	-	16.9	16.8	-4.9	-8.2	-10.5

주: 1999~2005년은 평균값임.

자료: IMF(2008.11),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IMF(2008), Global Insight(2008.11) 각국 경제지표.

나. 정책 현황 및 방향

■ 국제금융위기 전염효과 차단을 위한 공동대응 강구

- 2008년 11월 12일 개최된 '세계금융위기에 관한 아프리카 장관급 회의'에서 아프리카 각국 지도자들은 향후 국제금융위기의 전염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공동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함.
- 공동대응책에는 인프라 투자 증대, 지역경제협력, 구조조정 등이 포함됨.

■ 물가안정정책에서 경기부양정책으로 선회

- 금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아프리카 각국들은 원유 및 생필품 가격 상승, 오일머니 유입으로 인한 물가폭등을 우려하여 물가안정에 정책의 역점을 두었음.
- 그러나 최근 들어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아프리카 지역의 경기침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아프리카 각국 정부는 물가안정 정책에서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기업투자 촉진 및 정부재정지출 확대 등을 통한 경기부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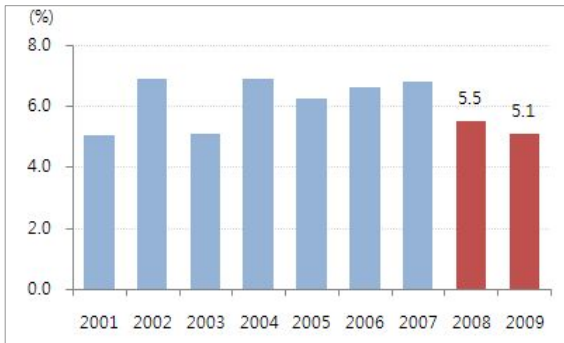
다. 2009년 경제 전망

■ 경제성장세 둔화 전망

-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원자재 가격급락 및 수출위축, FDI 및 ODA 감소, 해외송금 유입감소 등에 따른 영향으로 2009년 아프리카의 경제성장세는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 오일머니 감소에 따른 재정지출의 한계로 기존 개발프로젝트의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여기에 유가하락에 따른 오일메이저들의 투자위축도 예상된다.
- IMF는 2009년 아프리카 경제성장률을 2008년보다 다소 낮은 5.1%로 전망함.

그림 1. 아프리카 경제성장 추이 및 전망



주: 2008년과 2009년은 전망치.

자료: IMF(2008.11),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 소비자물가 안정 전망

- 2009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원유와 식량 등 생필품 가격의 안정으로 2008년(12%)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인 10%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수출 성장세 둔화 전망

- 아프리카 전체 수출의 약 70%를 접하는 있는 미국과 유럽 시장의 위축으로 수출 성장세의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2009년에는 아프리카 총수출의 68.5%를 차지하고 있는 원유 등 일차산품의 추가적인 가격하락이 예상되고 있어 아프리카의 수출은 더욱 위축될 것임.

- 아프리카 수출규모는 2001년 이후 연평균 32%의 성장세를 이어왔으나, 2009년에는 이보다 훨씬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산유국과 비산유국간의 엇갈린 경제성장 명암

- 앙골라, 수단, 나이지리아 등의 석유자원 부국들은 고유가 시기에 시작된 대규모의 석유개발 및 SOC 건설투자와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에 힘입어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이 기대됨.
- 이에 반해 비산유국의 경우에는 글로벌 경제침체로 인한 대외원조 감소, 만성적 경상수지 적자 등으로 성장률이 4% 대에 머물 것으로 보임.

표 2. 2009년 아프리카 주요 국가별 경제 전망

	해당 국가
저성장국 (3% 이하)	코모로(1.7), 스와질란드(2.5), 남아공(2.9) 등의 비산유국
중간성장국 (3~5%대)	케냐(5.6), 가봉(4.3), 보츠와나(4.8), 세네갈(4.7), 카메룬(4.8) 등의 비산유국
고성장국 (6% 이상)	앙골라(15.4), 나이지리아(6.2), 수단(7.2) 등의 산유국

자료: Global Insight(2008.11), 각국 경제성장 전망.

연구진(아중동팀):

* 국번: (02) 3460

박영호 부연구위원 (parkyh@kiep.go.kr, Tel: 1231)

허윤선 연구원 (yshur@kiep.go.kr, Tel: 1116)

5. 중앙아시아

가. 경제 동향

■ 2008년 경제성장률 하락 예상

- 에너지 수출 활황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건설, 금융부문이 부실화된 카자흐스탄은 2008년도에 경제성장률의 하락폭이 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키르기스 공화국과 타지키스탄도 무역수지 악화로 실질 GDP가 2~3% 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국내 시장의 개방도가 낮아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경제성장률 하락폭이 1%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임(표 1 참조).

■ 에너지 수출국들은 무역수지 흑자폭 확대, 에너지 수입국들은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 카자흐스탄은 고유가의 영향으로 2008년 상반기에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대러시아 가스수출가격의 인상으로 무역수지 흑자폭이 확대됨.
-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산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 공화국은 2008년 초 우즈베키스탄의 가스공급가격 인상으로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됨.
- 알루미늄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타지키스탄에서는 높은 에너지가격으로 인해 알루미늄 생산이 예년에 비해 감소함.
- 키르기스 공화국은 에너지가격 인상 외에도 세계적인 식료품가격 인상으로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됨.

나. 2009년 경제 전망

■ 에너지 생산국과 비생산국간 대비되는 경제성장률 전망

- 에너지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생산국들은 6~10%대의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에는 경제성장의 핵심인 가스의 대러시아 수출가격이 2008년 초 러시아와의 합의에 따라 다소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
- 카자흐스탄은 신용경색으로 인한 건설경기 하락 등 에너지 이외의 부문에서 경기침체가 2009년에도 지속되어 연간 3%대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 카자흐스탄의 원유 생산단가는 아직도 국제수준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되고, 수출선 확대(대중국 송유관 확장, BTC 라인으로의 원유 공급)도 예상되어 에너지 부문이 경기침체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타지키스탄, 키르기스 공화국과 같은 에너지 소비국들의 경우에는 에너지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됨.
- 타지키스탄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 알루미늄 생산부문은 국제 에너지가격 하락으로 이익을 볼 것이나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수입수요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임.

표 1. 2008년 실질GDP증가율 전망

(단위: %)

	2007년					2008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연간
카자흐스탄	10.5	9.9	8.8	4.8	8.5	6.0	4.8	1.0	3.5
우즈베키스탄	9.1	10.3	10.0	8.6	9.5	8.1	10.5	—	8.6
키르기스스탄	—				8.2	—			4.5
투르크메니스탄	—				6.0	—			5.0
타지키스탄	—				7.8	—			5.5

자료: EIU, Country Report, Oct.-Nov. 2008.

표 2. 2009년 중앙아시아의 경제성장률, 물가, 환율 전망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EIU	GI	EIU	GI	EIU	GI	EIU	GI	EIU	GI
실질 GDP 증가율(%)	3.0	3.4	6.5	6.2	7.0	10.9	5.0	4.3	4.5	2.8
소비자물가 상승률(%)	8.6	6.3	10.0	10.7	12.0	14.0	14.0	14.3	10.0	13.1
연평균 환율 (각국통화/달러)	127.86	119.8	1,384	1,421.5	15,125	15,693.3	3.56	3.6	38.62	41.4

주: EIU의 카자흐스탄 소비자물가상승률,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환율은 연말 기준.
 자료: EIU, Country Report, Oct.-Nov. 2008; Global Insight, Oct.-Nov. 2008.

■ 한국의 대중아시아 투자 및 수출확대 가능성

-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과 최근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진출 강화정책으로 인해 2009년 한국의 대중아시아 투자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2009년도 경제성장률 저하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한국의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신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역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2008년 하반기부터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수출규모는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는 수출입이 모두 증가하고 있음.
- 한국의 대중아시아 교역에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비중은 약 90%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KIEP**

연구진:

주진홍 유럽팀 전문연구원

(joojh@kiep.go.kr, Tel: 3460-1053)